

제429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9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1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10시06분)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조정훈 위원 어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했던 자료제출, 특히 AI 예산에 대해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제출을 하실 의사, 자료제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기재부가 답변하면……

○소위원장 **한병도** 예, 기재부가 한번 답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관련된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소소위 과정에

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또 한 가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이 자료들과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출력물로, 책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다 필요하고 제출된 서류지만 여러 가지 숫자나 분석을 위해서는 소위 전자파일, 엑셀이든지 전자파일로와 가지고 이걸 여러 가지, 수백수천 개의 사업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엑셀 파일 형태로 위원님들에게 제출되는 것 아닌가요?

○**조정훈 위원** 아닙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님,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지금 이 소위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훈 위원** 소위 자료 말고 정부 제출 예산.

○**송기현 위원** 그건 원래 총액으로 해서 각자 세세한 내내역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돼 있잖아요.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책으로 옵니다.

○**송기현 위원** 책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향후 파일로 하도록 하는 건 필요하기는 한데……

○**조정훈 위원** 그리고 파일로 와도 PDF나 워드 파일로 와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 기재부에다가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이게 지금 PDF 파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는 되어 있는데 이게 PDF 파일로 되어 있으면 자료를 우리가 특정한 키워드를 넣고서 조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엑셀 파일로 공개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때 답변 중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여야 모두 이걸 좀,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서……

○**송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위 과정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그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엑셀 파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PDF가 아니고?

○**강승규 위원** PDF는 분석이 안 돼요.

○**조정훈 위원** PDF를, 분명히 엑셀 파일로 작업을 하고 PDF로 변환해서 국회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엑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임미애 위원** 변용 때문에……

○**강승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랬겠지요.

○**임미애 위원** 변용 때문에 사실 지방정부도 다 PDF거든요.

○**송기현 위원** 이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매년 해 왔던 문제인데, 매년 지적돼 왔던 문제인데 하여튼 기본적인 원칙을 내세워 가지고 PDF 파일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장 한병도 아, 계속됐던……

○송기현 위원 계속해 왔던 문제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지금 여야 위원님들 공히 말씀을 다 해 주시는 거거든요. 회의 끝나면, 감사님 오시면 위원장하고 감사 간에 지금 여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부처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오늘은 감사대행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아니, 오후에 오신다고……

○조정훈 위원 오실 수 있으면.

○이소영 위원 과거에 디브레인이라는 페이지 ID를 소위 위원들한테 공유하고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예결위에서 아시는 바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각 의원실에서 기재부에 신청하시면 디브레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 볼 수 있습니까, 신청해 주시면? 확인만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그거는 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오전 회의 끝나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두루두루 해 가지고 모여서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임기근입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기획재정부 기조실장 황순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자료 5권입니다.

3페이지 기획재정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3건 있습니다.

먼저 1번 한국은행 잉여금입니다.

한은 잉여금은 당해 연도 한은의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내년도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 한은 당기순이익은 9월 말 기준으로 이미 24년 당기순이익을 7795억 원 초과하였고 동일한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25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11조 5984억 원으로 이 중 약 70%가 정부에 세입처리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8500억 상임위 증액 의견과 1조 70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측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많이 잡혀 가지고 결손이 생겨도 문제고 또 너무 적게 잡혀도 문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한 지금 9월까지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실적은 지금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1조 7000억 원 증액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8500억 수준이 일단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 의견대로 8500억 원 증액을 결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박민규 위원 제가 1조 7000억 증액 요청드렸었는데 상임위의 의견 존중하고 철회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니요, 잠깐만. 철회는 잠깐만. 철회를……

○박민규 위원 철회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거는 기재부에서도 정확한 예상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상황이어서 상임위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하고 이거보다, 이 1조 7000억은 조금 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보류하고 기재부랑 좀 적정 수준을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8500억 원이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소영 간사님 제안대로 보류하고 추후에 소소위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페이지 2번, 국세물납주식매각대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넥슨 지주사 평가가치의 80%를 2025년 예산안에, 20%는 26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NXC 주식 매각이 올해 모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25년 예산안에 반영된 3조 7000억 원을 다시 내년 예산안에 증액을 해서 내년에 다시 매각을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첫 번째, 저희가 한은 잉여금 관련해서 불확실성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NXC 물납주식매각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큰 사항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금년도에 팔면 총 4조 7000억어치를 팔 걸로 예상을 하고 금년도에 3조 7000억 원을 잡고 내년도 예산을 1조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끝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경쟁입찰은 유찰이 됐는데 수의계약을 해 볼까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접촉하는 일부 기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얘기가 잘 되면 내년에 1조 원 정도가 잡힐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금년에 만약에 이게 계약이 안 되면, 내년에 저희가 1조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이 역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조 원 정도를 잡았는데 1조 원 이상을 잡게 되면 이게 세입결손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민규 위원님도 최초에는 3조 7000억 원을 잡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1조 원 정도를 잡는 게 여러 가지로 세입결손의 가능성을 낮추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 같다,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박민규 위원 차관님 말씀, 고충도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결국은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 사안이고 또 이게 아까 말씀처럼 벌써 2년, 3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기업은행 한 5년째 유지되고 결국은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 세수 확장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바 있지만 원래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3조 7000억 정도의 세입으로 잡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 건도 보류해서 이것 세입과 관련된 부분이니 이후에 기재부와 적정한 세입 규모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겠습니다. 이것도 보류하고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페이지 3번 정부출자수입입니다.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액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4년, 25년 각각 수납액이 예산보다 크고 24년 및 25년 예산안 편성 시 예상 당기순이익 대비 예산안 편성 비율이 각각 18.4%, 18.6%인 점을 감안해서 1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논리는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이 1조 4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요. 25년도 당기순이익 전망치에다가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을 곱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적사항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6년 예산안인 1조 4500억보다 과거에 더 많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24년하고 25년도에 산업은행의 특이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특이요인을 배제하게 되면 24년도에는 1조 60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1조 1000이고요. 그리고 25년도에 1조 7000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이요인을 배제하면 1조 300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감안하면 저희가 정부안을 제출한 대로 1조 4500억 원이 저희는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두 개 항목, 한은 잉여금하고 그리고 넥슨의 물납주식 매각대는 소소위에서 추가로 논의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기재부가 말씀하시는 취지도 이해는 되는데요.

실제로 한전 딱 하나의 공기업만 하더라도 올해 세전이익이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회의록이 남는 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배당성향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산은을 통해서 정부로 오는 것 그리고 정부의 직접지분,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쟁하기보다는 이것을 보류해 놓고 이 부분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차관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소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배당 수입을 산정할 때 평균치에다 그냥 배당률의 평균을 각 개별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곱한 게 아니고 개별 기업의 당기순이익 전망치에다가 그 회사의 배당률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소영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크게 해당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기재부에게 좀 따끔한 발언들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특히 세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너무 오버슈팅을 하면 이것은 세출구조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고 결국은 부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입이, 정말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소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출자수입을 계산하는 공식에 착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겠지요. 다만 전체 규모의 그냥 단순 평균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주요 투자의 예상 당기순이익에 배당성향을 곱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계산이 됐다면 여기서 너무 예산을 증액하는…… 그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운용 원칙상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남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이견이 있고 또 그 주장들 감안해서 한번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2건, 감·중액사업 5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입니다.

내역사업인 TARB 및 NDCC 예산 연계 지원 사업에 대해,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도 준비 미흡 및 TARB·NDCC 평가 결과는 26년 12월에 도출되어 재평가는 27년에나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4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예산편성·심의지원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실제 사업 수행 기간이 3개월임에도 기재부는 5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과다 편성된 2개월분 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상임위원회에서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임위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녹색기후기획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 실적이 저조하고 일반수용비 집행이 부진하므로 일반수용비의 전년 대비 증액분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의 3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9페이지 3번 금융협력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과 간담회는 일반운영비가 아닌 사업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부펀드 투자협력 관련 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의 1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4번 혁신조달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재부는 26년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산출 시 민간위원 정원이 아닌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전체 정원으로 수당을 산출했으므로 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의 3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상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 상환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재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국채 이자가 24년 28.3조 원에서 29년은 42.1조 원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자국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현재의 국채발행 규모하고 이자율 수준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기……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차관님, 지금 재정위기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국채 이자가 28.3조에서 29년에 42조로 경충, 48.8%로 폭증하고 국가채무가 지금 515조가 증가하는 이런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이 적자국채 이것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초과 세입 가능성을 문제인 정부 때는, 그때 부동산 폭등이 있었잖아요. 폭등이 있었고 그게 초과 세입이 발생했지요. 현재 또 증권거래세 확대 이것을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런 부분 전체를 고려할 때 예산편성률 이자율 이것은, 3.0%

는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적자국채 축소하고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5000억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지금 사실은 증권거래세가 올라간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금리 관련해서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결될지 인하될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수를 정확하게 추정해 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민규 위원 특히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의 국채발행 규모하고 실질적으로 그해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 지출 규모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큰 함수관계는 없습니다. 왜? 이미 금년까지 발행된 누적된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 이자율은 결정돼 있는 거고 새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년에 신규 발행하는 규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국세 수입 자체가 중요인도 있고 감요인도 있고 해서, 이게 내년에 새로 발행할 국채가 줄어든다는 예측이 지금 없고 그리고 내년에 설사 국채 신규로 발행하는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를 저희가 지금 3.0을 예측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국채금리가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 국채의 가중평균금리가 3.1%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발행 규모가 부족하더라도 최근의 국채금리 여건을 반영했을 때는 지금 계상돼 있는 이자 규모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국채 어느 정도 발행 예정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내년에는 한 110조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110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110조를 3%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이자율 자체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3.1% 이렇게 이야기한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아니요, 그렇지 않…… 저희는 지금 3%를 했고요. 1년치를 계산한 것도 아니고 평잔을 생각해서 7개월분만 반영했습니다. 절대로 지금 과다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큰 틀에서 지금 확장재정을 하고 있고 김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예산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세입이 따라오지 못하면 빚내서 돈을 갚아야겠지요. 그 데이터를 모르고 한 것은 아닐 텐데,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난주·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저희 당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적자액을 부채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제가 꼭 하나 부대의견으로 남기고 또 요청하고 싶은 게 국가채무의, 국가부채에 대한 효용성 또는 지불구조의 합리화를 꼭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가부채의 구성을 보면 장단기채권, 국채 상당히 다양한 채무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의 비율을 얼마로 가져갈지 또 앞으로 향후 이자율 변동을 예측해서 어떻게 해야 똑같은 부채가 또……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또는 관리할 수 있으면서 이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검토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 차관님 더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장기·단기 국채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단기국채를 발행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좀, 규모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발행한 부채를 어떻게 가장 저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몇 조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할 것을 저는 부대의견에 담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제가 보기에다 국힘 위원님들 우려사항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더 보류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임미애 위원** 이게 보류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을 담아서 이것은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그러면 부대의견 달면 원안 유지 동의하시는 건가요?

○**김대식 위원** 아니, 이것은 한 번 더 보류해 가지고 더 논의 좀 하시지요.

○**송기현 위원** 보류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 사안인데 왜냐하면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확정된, 거의 확정애 가까운 금액이라는 건데 나중에 보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강승규 위원** 그래도 다른 것하고 같이 좀 해 보지요.

○**조계원 위원** 달라질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의견만 한번 들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이자비용인데요. 조정훈 위원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보고……

○**강승규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확장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

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정확장이 너무 큰 폭으로 오고 또 그것의 주요 재원조달이 부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자금 같은 것을 부채 발행하고 이자 지급하는 데에 계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장,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체 예산 조정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 줄여 보자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견도 맞고 기재부차관 얘기처럼 국채 발생 규모와 이자 비용은 실은 워낙 작은 포션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류되더라도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테니까 잠깐만 보류하시고 필요하면 오후에 저희가 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고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페이지 기획재정정보화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온북 추가 도입 자체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온북 도입 단가에 맞추어 25년 단가를 기준으로 2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사업비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정보화 사업비로 배분하고 관련 직제 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이 사업 예산안 99억 4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재정경제 정보화 및 기획예산 정보화 세부사업을 각각 신설·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개편 이후 부처별 예산 규모는 아직 협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기획재정부가 26년 1월 2일 분리 시행되면 시행일에 신규 세부사업으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4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6페이지 보시면 방금 이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88번과 89번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증감액 연계 사업이 다수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가 이것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확정이 됐고요. 기후부하고 성평등가족부 같은 경우는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 둘로 나누는 것은 1월 2일 날짜로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예산실에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가면 되겠지요, 이제. 그리고 원래 대외 차관보실에서 하던 사업은 그대로 가면 되겠지요, 이제.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초실에서 하는 정보화 사업이나 이런 공통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이제 할 수 없이 쪼개 가지고 2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개로 만들려면 결국에는 지금 기획재정부에 있는 정보화 사업을 0으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재

정경제부에 얼마, 기획예산처에 얼마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사업들이 이 사업을 포함해서 뒤로 죽 몇 개 사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요 여기서 감액하는 거나 쪼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0을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은 감액하는 것대로 여기서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재정경제부 못하고 기획예산처 못하고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것은 증액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강승규 위원 의견이요.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지금 그 예산을 다 일률적으로 삭 여기사 개별 심사하지 말고 그 항목 항목은 다 감액 조치 등을 해 놓고 추후 증액에서 하는 걸로 정리해 버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소위원장 한병도 이 책자에는 몇 개나 되나요, 똑같은 사항들이?

○강승규 위원 할 때마다 하면 되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오늘 심사할 거에 몇 개 들어, 오늘 이것 하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아닙니다. 뒤에 많습디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방금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일괄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희는 감액만 하면 되고요 증액할 때는 각각 어떻게 나눌지는 따로 논의하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증액 규모는 아직 확정도 안 됐습디다.

○조정훈 위원 감액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콕콕 가자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하고 관련된 감액 콕지가 이 책자 기준으로 17개 콕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때그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소영 위원 상임위 2억 900만 원 동의는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건 어떻게 해요, 상임위하고 예결위 2억 900만 원과 99억 4200만 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다 감액하시면 됩니다. 다 감액하시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 감액이요?

정보화 관련 사업 전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페이지 미래융복합경제교육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및 재정교육 사업 등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2600만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5년 간담회 개최 횟수를 고려할 때 예산안의 산출 기준인 98회는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1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 중 기획예산처 이관이 필요한 재정교육 관련 비용 3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재정교육 사업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전액 감액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41억 5700만 원인데요, 41억 5700만 원을 전액 감액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을 제외하고는 집행률이 28~39% 수준이고 집행액 역시 2조 원을 하회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각 부처의 재해대책비가 증액 편성된 것을 고려해서 1조 7000억 원 감액—일반예비비 7000억 원, 목적예비비 1조 원입니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25년도에 3조 8000억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연말까지 저희가 이 예비비 예산을 거의 소진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26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조 2000을 이렇게 계상해 났는데요. 최근 5년간 평균을 보면 4조 5000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성격의 특수성, 아까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또한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예산이니 저희는 26년 정부안에 계상된 4조 2000억 원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했겠지만 저는 내로남불 편성이고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난해에 한번 보세요. 민주당은 어떻게 했어요? 용처가 없는 예산이며—내가 작년 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타 부처 재해대책비로 대처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일 때는 과다하다고 일방적으로 삭감해 놓고 여당이 되니까 당정협의회에서 4조 2000억을 편성하고, 이걸 꿈수 예산 확보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보장 소요 예비비 일반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로 이관하는 이것도 하나의 꿈수를 통해서, 용처가 없어요. 용처가 없는 순수 일반예비비를 8000억이나 확보해 놓고 또 집행도 불투명하고.

25년 예비비 집행 한번 보세요. 청와대 이전 259억, 경찰 경호부대 공사 45억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 계약 형태, 시행업체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게 26년도 예비비 4.2조 원을 일반 0.8조, 목적 3.4조 이거는 정말 대체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로남불 사례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김대식 위원님 말씀처럼 좀 집행이 불투명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재위에서 관련된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켰고 법사위까지 의결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예비비사용계획서를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불가능한 관련된 정부의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닌 원안대로 가기를 주장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하고 다음 차관님 말씀……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시점 차이는 1년 차이밖에 안 돼 있고요. 예비비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의 기능들이 다 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재해 목적의 예비비까지 완전, 1조 원 정도를 삭감을 하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올해 집중 수해가 나니까 예산군 한 곳에서만 1400억 정도의 수해 복구비가 들어가고요. 홍성에서도 한 칠팔백억, 충남 서부 지역에서도 수천억 원의,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운 재해복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민주당께서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저 난도질을 했잖아요. 그래 놓고 작년 추경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다 국민들에게 ‘아, 저 친구들 또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작정 삭감했던 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하고요. 이 예비비에 대해서도 더 분명한 예비비 책정 이유 등을 보류했다가 추후 더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꼭지까지도 하나요, 지금? 8-2번 지금……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예비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하나만 하고 있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강승규 위원 아니, 예비비 두 번째, 위엿것 두 번째 꼭지 그것도 하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위엿것만 일단 읽으셨습니다.

○강승규 위원 위엿것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꼭지도 지금 심의하는 거예요?

○김대식 위원 아니, 위엿것만.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비비 관련해서 문제 제기 주신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여당 입장이나 야당 입장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행정부 관점에서 보면 24년 예비비의 최종금액은 4조 2000억 원이고요. 25년 예비비의 최종금액은 3조 8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폭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26년에 4조 2000억 원이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투명성하고 관련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보하고 관련되는 것은 일반예비비 쪽에 포함돼 있으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민규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예비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일반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로 옮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하고 관련해서는 재난·재해대책비를,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반영하고 재난·재해대책비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26년에는 각 부처에 충분하게 반영을 했다 그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먼저 듣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예비비 문제는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별도로 좀 면밀하게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보류하기 전에, 아까 기재부차관님 말씀 중에 24년도 예비비가 4.2조였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미애 위원 25년도 예비비가 3.8조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임미애 위원 결론적으로 4000억 정도가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예비비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예비비 집행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이 지적이 여러 차례 되었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처가 이게 타당하나, 특히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해외 일정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집행되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되었던 거지 정상적인 국정운동을 위해서는 평상시대로 복원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요구한 대로 원안대로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까지만 듣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유감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8조라고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는 민주당이 통과시킬 때는 2.4조였습니다. 계엄 이후 추경에서, 이재명 정부 이후에 추경에서 증액해서 3.8조가 된 거지 작년 12월에 이 3.8조 전액을 통과시킨 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3.8조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또 민주당이 삭감하는 주장들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일단 적게 가고 부족하면 국고채 무부담행위, 그러니까 국채 발행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행안부, 농림축산부 등 관계부처

재해대책비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삭감하셨습니다.

똑같은 논리는 왜 올해는 적용되면 안 됩니까? 똑같은 논리로 빗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면? 똑같은 논리로 재해 발생하면 행안부, 농림축산부 등에서 관련 부처 재해대책비로 대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논리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정권에 관계없이……

목적예비비를 좀 더 투명하게 쓰겠다고요? 찬성합니다. 그건 맞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24년 만에 25년 예산을 검토하면서 민주당이 했던 주장들이 정치적인 주장이었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이 예비비를…… 이 예비비만 깎았습니까? 다른 예비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정치적인 공격이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래, 올해는 예비비 필요하니까 4.2조 다 가져가세요’ 어떻게 이걸 동의하기를 바라십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당 차원의 사과와, 당 차원의 행위를 예결위에서 사과하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당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당에서 입장을 낸 거잖아요.

○이소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문제 제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와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과하라, 예결위 안에서 민주당이 사과하라 그런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맞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제가 일단 사실관계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작년에 예산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12·3 계엄 이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보고 있듯이 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도 AX, AI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시듯이 면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는 삭감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협의되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협상의 문을 닫아 버리고 계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에 여야 간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문을 당시 여당이 닫았다는 점은 제가 사실관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해라? 당연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예비비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이런 정치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계엄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정쟁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 강승규 위원님.

먼저 임미애 위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 강승규 위원님.

○조계원 위원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두 분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팩트를, 사실을 바로잡아야 돼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니까 임미애 위원님 다음에 강승규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소영 위원님이 많은 부분 말씀하셔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논의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는 징벌적인 제재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이 계엄 이후였다는 것 분명하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인 제재가 들어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2.4조였냐,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팩트 체크를 하는데 참 교묘한 수법이네요.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이었고 소위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시다만 작년에 예결위 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던 삭감 및 증액 논의가 어느 날 누군가의 오더에 의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중지되고 증액 예산 없이 삭감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통과시킨 것이 계엄 후입니까?

○이소영 위원 그것은 계엄 전이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나중에 절차적으로 통과한 것이 계엄 후이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나, 민주당이 무모하게 예산을, 4.5조 원의 예비비 예산을 재해대책비에서 1조 원 깎고 일반예비비에서 깎고 하는 것 등을, 그것이 계엄에 대한 예결위 차원의 징벌이라고요? 그래서 계엄 후에 한 것이, 예산이 계엄 후에 타결됐다고요?

○이소영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건 계엄과는 관계가 없지요. 그 얘기에요.

○강승규 위원 아니,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임미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징벌적인 제재라는 것은……

○조정훈 위원 좀 들어 주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강승규 위원 지금도 예결위 예산이 통과된 것이 계엄 후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계엄 때문에 예비비 예산을 이렇게 깎았다,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겁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그것 다 지켜봤는데…… 많은 국민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또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역치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야당의 협조, 이해를 구하는 협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작년에 목적예비비, 재해대책비 같은 것을 그렇게 1조 원씩이나 깎아 대고 특활비 깎고 특경비 다 제로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변명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에 대해서 공

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예산심의가 그대로 정부가 요구한 대로 예비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송기현 위원** 잠깐만, 간단히 얘기할까요.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다가 예산안이 아마 저희 당에서 단독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요. 단독으로 처리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2022년도에 예결위 소위까지 하면서 봤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거기서 보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볼 때는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협상해서 타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해요. 일단 그렇게 된 상태.

두 번째, 일단 예결위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안 돼서 예결위 자체 내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 강행 통과하는 것은 저희 당의 전략상은 당연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일단 예결위 단계에서 저희 입장에서 강행 통과하는 것은 전략상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정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히 기재부하고 당시 여당이 협의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한 수정안을 당연히 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협상을 통한 수정안을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윤석열은 그냥 계엄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요, 올해도. 예비비 지출이 윤석열 때처럼 정말 불투명하게 됐다고 그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집권 초기부터……

○**소위원장 한병도** 이제 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송기현 위원** 이게 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저희들이 박민규 위원님 말씀하시고 기재위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차원에서만 보고서 우리가 예산안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위원** 저도 딱 2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최형두 위원님 손 드셨으니까 하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우리가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예결소위였는데 당시 상당히 감액,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감액안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당 지도부에서 정해졌고 그래서 당시 우리 예결소위원들 세 명 중의 한 분의 서명은 빠져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우회적인 이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만큼 우리나라

가 전근대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그것을 온통 무슨 누구누구가 다 해 처먹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갑자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신뢰를 다시 한다면 연속성도 없어지는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분명히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25년 예산 과정은 논란과 입장 차이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는 국민경제 그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차원에서 26년에는 4.2조 원의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소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항에 대해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4페이지 통상 대응……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아까 밑엿것은 논의 안 해요?

○조정훈 위원 증액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증액, 증액……

○강승규 위원 아, 증액이라? 오케이,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밑의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리려는 내용과 연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미 투자패키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은에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의 맨 마지막 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700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목적예비비에 7000억 원을 증액하며 예산총칙상 목적예비비의 용도에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소요 경비 7000억 원을 명시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앞 페이지의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아직 좀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5페이지의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대미 협상 결과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사·기금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두 번째 줄의 끝부분입니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을 현행 15.4%에서 13%로 낮추면 27.2조 원의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7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바로 아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7000억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것을 대체할 예산 금액과 예산을 계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위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한테 이해도 할 겸 질문…… 이게 당정 자체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비롯해서 대미투자 이 예산이 1조 9000억 편성이 됐지요? 1조 9000억입니까, 패키지 예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거기에 산업은행이 6300억, 수출입은행이 7000억, 무역보험기금이 5700억 이래서 나눠 가지고 이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공사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공부하는 문제점에 마스크 그 1500억 불 있잖아요, 250조 원. 여기에 민간 조성이라고 하면서 90조 원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게 방침이예요?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단계에 안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90조 원의 조달 방법이 전혀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안에 이자 지원으로 3조 원 반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현재 1.9조에서 플러스알파로 1.1조를 추가하면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재원 마련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1500억 불 관련해 가지고는 2000억 불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2000억 불은 투자 개념이고요. 1500억 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간이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정부가 보증 아니면 일부가 융자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정부가 전액 마련할 필요는 없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2000억 달러를 대미 투자, 현금 투자해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외환보유액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외환보유액에 따른 외화 운용수익과 기타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국회 심의 없이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투자 대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향후 추진 계획 자체가 모두가 깜깜이야. 그래서 이게 전혀 지금 국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니까 그쪽에서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는 있겠지만 이 전체가 하나도 설명이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깜깜이 대미투자특별법이야.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지금 질문 겸 이해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위원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어제 그

제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위원회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저희가 곧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먼저 하고 박민규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산자위에서 어제 팩트시트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가 다 완벽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재원조달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0억 불의 현금 투자 그다음에 마스가에 대한 1500억 불 투자 관련해서 1500억 불 마스가가 민간 조성이라고 하였지만 지금 일부 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 중에서, 그러니까 1500억 불 민간 조성 관련해서 그중의 한 90조 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다. 물론 팩트시트나 산중위 보고에서 장관도 마스가에 대해서는 보증이라든지 대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부가 지원한다는 규모가 지금 일부 보도된 것처럼 90조 원이라는 게 맞아요? 지원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1500억 불이면 250조 원 정도 되는데 한 3분의 1이 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은요 저희가 조만간 대미 투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할 거고요. 거기에 보면 공사하고 관련된 내용과 기금하고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과 관계돼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증액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내용은 감액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증액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그러면 감액 관련해서도 우리가 산업, 수출, 무보 등에 합쳐서 총 1.9조 원을 증액시켜서 거기에다가 BIS로 대출 보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1.9조 원이 지원될 때 실제 BIS비율도 아까 13%로 낮추고 이럴 때 너무 많은 재원들이 대미 투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강승규 위원님이 질의 주신 우려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듣고 그다음에 조정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관련해서 차관님이 설명했듯이 기본적으로 대미협상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리스크가 줄어들었고 빨리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상임위별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의혹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밝힐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감에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감액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류하고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훈 위원 차관님, 이 질문, 이 토론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감액만 해 달

라고, 나머지 토론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국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팩트시트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 한 줄 한 줄 다 읽었습니다. 숫자만 계속 제가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돼서 하나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투자에 관해서 숫자가 큰 게 2개가 나옵니다. 조선산업 등에서 마스가 1500억 불 투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추가적으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1500억과 2000억 달러는 별개, 합해서 3500억이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플러스, 제가 돈 재원은 그걸 하고 그리고 몇 페이지 넘어가면 국방 관련 협업이 나옵니다. 국방 관련 협업이 나오는데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한다. 그래서 큰 틀에서 33빌리언(billion), 그러니까 한 50조 정도 되는 추가 구매, 이것은 1500억과 2000억 대미 투자와 별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별개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3500억 달러, 너무 3500억 달러가 어느 규모인지 몰라서 제가 거칠게 환율을 계산해 봤더니 약 590조 원입니다. 590조 원에 추가적으로 33빌리언 이게 되니까 한 5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40조 원 정도를 우리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미국에 투자 또는 구매하는 게 팩트시트의 내용이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팩트시트의 내용이 맞고요.

○조정훈 위원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국민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정훈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답변하실 시간은 위원장님이 차고 넘치게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1500억 불 관련 그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hipbuilding) 등등인데 결국 마스가 투자인데 어프루브 인베스먼트(approve investment) 그래서 양 국가가 어떤 거에 투자하는지 서로 합의를 하시겠지요. 이걸 맞지요, 1500억 불에 대해서 마스가는? 조선에 대해서는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투자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다음 게 지금 모호하기 짝이 없는 건데 2000억 달러, 약 340조의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MOU를 사인할 거고, 이거는 MOU는 양국의 대표들이 사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인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조정훈 위원 그렇지요?

2000억 달러, 약 340조 규모의 투자 내용에 대해서 각 정부가 사인한다라는 것은 이게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국가가 책임지고 약속하겠다는 상당히 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조정훈 위원 그러면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현금이라는 말은 써 있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솔직히 인정할게요. 이 2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국가가 하는 겁니까, 민간이 하는 겁니까, 차관님?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2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 MOU, 팩트시트 첫 페이지의 맨 마지막 문단 이걸 국가가 하는 겁니까, 민간이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MOU를 체결하는 주체는 정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법에 저희가 제시를 하겠지만 정부 자체가 투자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 필요 없는 거네요, 이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정부 예산이라는 게요 정부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나 지자체 보조사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의 최종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고 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단순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자, 이제 요약들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차관님, 그건 잘못 얘기했는데 2000억은 정부가 투자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지요, 2000억 불 현금은.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 조정훈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2000억 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김대식 위원님의 ‘외환보유고를 쓸 거지요?’라는 질문에—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그게 아니고요 외환보유액을 운용한 운용수익 등에서 쓸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운용수익만 들어가는 겁니까, 외환보유고의 일부도 쓸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외환보유고 자체가 쓰이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운용수익만 쓸 거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게 규모가 얼마입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외환 운용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한 150억 불 이상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150억 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한병도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것도……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요, 기회드릴게요.

○이소영 위원 저희도 발언을 좀……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이건 지금……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드릴게요. 제가 똑같이 다 드리니까요.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오늘 팩트시트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토론하고자 하면 아마 오늘 소위를 밤새 해도 부족할 텐데요.

지금 논의의 대상은 이 정부안을 짤 때, 8월에 정부안을 짰는데 그때는 대미 협상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모호,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안으로 정부안에 3개 기관에 나누어서 예산안을 임시로 배정해 놓은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예산안 심의가 되기 전에 관세협상이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3개 기관이 나누어서 출자만 해 놓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걸 책임 있게 투자 내용도 검토하고 관리할 조직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관련 상임위 그리고 여야 지도부 간에도 법률안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 어떤 일정으로 통과시킬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결소위에서 논의할 안건은 구체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 법률을 어떤 내용으로 만들 것이냐가 아니라 8월 달 시점에서 정부가 3개 기관에 임의로, 임시로 배정해 놓은 것을 하나로 모아서 이게 법률안이 나중에 통과됐을 때 이거에 상응하는 예산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다면 보류하고 지도부의 법률안 제정 관련한 논의와 맞추어서 저희가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법안 제정을 전제로 증액을 추후 논의하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논의를 하고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 가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말씀 듣고 차관님 정리하시고 이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소영 간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의 큰 방향은 맞는데 일단 출자금, 3개 기관의 출자하는 액수 등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전이었지만 그 불확실성이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령이나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류했다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차관님, 아까 우리 2000억 불의 현금 투자는 사실은 외환보유액 이자로 하든 뭐든 1년에 리미트 200억 불까지는 이자가 안 되면 외환보유고로 하든 그런 취지인 거지요. 그것이 불안할 때는 줄인다고 조건이 붙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직접 정부가 투자하는 게 2000억 불이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1차 협상에서 김용범 실장이 3500억 불의 대부분이 보증이나 대출이고 실제 현금투자는 5%밖에 안 된다고 자화자찬했다가 2차에서 지금 2000억 불이 현금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비판적인 건데 그것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되지요.

아까 김대식 위원님과 조정훈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차관님이 ‘외환보유고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환보유고 하나도 안 건드리면 우리가 그런 협상에서 될 걱정을 해요?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 1조 9000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증액 과정에서 저희가

또 소상히 위원님들과 상의를 올리겠지만 1조 9000이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내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국방 쪽 관련해 가지고 추가 부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국방 쪽 관련해서 추가 부담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왜? 우리나라 국방비가 이미 지금 상당한 규모고요 그게 연도별로 증가되는 기본적인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 포션에서 가급적이면 충당해서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2000억 불하고 1500억 불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언론에서 보시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안전장치가 마련이 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러면 이걸 전액 감액하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보류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류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앞에 전액 감액이라는 표현을 쓰셔 가지고……

○김대식 위원 전액 감액이라고 했어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거 감액하기로 했잖아요. 감액하고……

○이소영 위원 감액은 지금 동의하시는 거고요.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은 다 이견이 없잖아요.

○이소영 위원 야당에서 감액은 동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증액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액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출자한 펀드의 주목적 투자비율이 낮아 실제 공급망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1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 사업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므로 저희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기재부 담당입니다.

24년 조성한 펀드, 수출입은행 투자액의 1.5배, 고작 3000억만 공급망에 사용하도록 합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펀드 아닙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김대식 위원 3000억만 공급망에 사용하도록 합의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현재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1.5배.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민간자금도 1조 600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1.8조 원 규모로 자금이 조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의 사업 목적이 좀 이탈이 됐어요. 지금 핵심 목적인 해외 광물 확보가 아닌 항공기 부품, 화장품, 재활용회사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기초실장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황순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망안정화 펀드는 공급망기금에서 1000억 원 그리고 수은에서 1000억 원 그리고 민간자금 1.6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00억 한도는 공급망기금과 수은에서 출자한 2000억에 대한 투자 한도 3500억을 말씀드린 거고요. 민간자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1.6조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어디에 투자하라고 강제하기는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한도로 공공부문의 자금의 한도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보수정권이 잡든 진보정권이 잡든 간에 정책의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볼까요. 이명박 정부의 해외광산개발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적폐로 몰아 가지고 다 매각했잖아요.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겠단?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담당 국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부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펀드는 공공자금과 민간이 합동으로 들어간 민관 합동 사모펀드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100억 원을 지금 수은에 출자하려고 하는 거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수은에서 운영하는 10조 원의 별도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이 펀드에 1000억을 넣고 또는 수은에서 1000억을 넣어 가지고 민간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조성한 거고.

여기에서 주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민관 사모펀드를 조성할 때는 주목적 투자비율이 출자금의 1.5배 정도가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펀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100억 원을 넣는 것은 수은에 출자를 내서 수은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을 해 가지고 전액 다 공급망 안정화 관련된 전략적인 투자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BIS 하락 방지 명목으로 100억 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손실이 났다, 그럴 때 국가재원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조삼모사지 어찌된 겁니까.

○**기획재정부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 고위험, 특히 처음에 탐사부터 채굴까지는 아무래도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간이 그런 상업적인 수익이 나지 않는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에서는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은에 출자를 100억 원 정

도 해서 여기에 따라서 특별 투자 한도 1000억 원을 만들어서 그 1000억 원 한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 핵심 광물이나 또 물류 인프라나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기금이 대출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투자를 열심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출자를 하게 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 자체를, 100억 원을 삭감하고 필요시에는 수출입은행 자체 자금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그런데 수은은 좀 다릅니다. 수은에서는 일단 저희 기금이 국가보조금 차원으로 재원을 조달하는데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또 손실에 대해서 상당히, 리스크에 대해서 위험회피적인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수은에서는 해외투자, 해외 진출 쪽이지 이걸 또 국내 공급망 쪽에 투자를 못 합니다. 따라서 이 기금에 수은과 별도로 저희들이 정부자금을 넣어서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투자 한도를 특별하게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과거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기록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에서의 에너지 자원 투자 관련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고 그 당시 다음 문재인 정부 때 그 부분을 전면 폐지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면 되겠습니까? 발전해야지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은 더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요즘 국제뉴스 보면 매일매일 미중 갈등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지금 중·일 갈등도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원이나 핵심경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험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기투자를 위해서 100억 원을 수은에 넣고 그걸로 펀드를 만들어서 오로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거에만 전략적으로 투자하게끔 만든 특별 한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박민규 위원님 말씀에, 이게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러는데 이게 계속해서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이런 에너지 정책은 단기간에 실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10년, 20년에…… 그때 당시에 팔았던 자산들이 지금에 와서 엄청난 효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직자들은 기존 틀에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부터 회의 속도 좀 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요, 이소영 위원님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공급망이라든지 해외자원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 정부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또 비판한 정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급망이든 해외자원기업이든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재정 투입이 필요한지 어떻게 보증,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동안 해 오던 공급망 확대도 그렇고 앞으로 100억을 더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들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좋은 취지로 계속 이어 가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어서 전 정부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2022년에 류성걸 의원님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공급망안정화법이 만들어지고 그거에 기해서 202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당시에는 코로나 의약품이나 요소수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난리가 나 가지고 이런 법도 제정되고 이런 기금도 마련되고 이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희토류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확대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이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시고요.

○임미애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짧게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해외자원 개발 사업하고 공급망안정화 사업은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내용을 섞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마치 필요 없는 사업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사족 같지만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공급망 안정화 문제는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갈등이 쉽사리 해결된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요한 광물을 필요로 하는 신기술 발전 이게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공급망 안정화에 진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 방식하고 관련해서 이 일을 수출입은행에 다 맡겨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 부채 부담이 있는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막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과 국채 부담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정부가 보증채를 하거나 일부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올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 항에 대해서도 보류하고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7페이지 11번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금 사업에 대해 협동조합의 운영률이 50%에 불과하여 예산 증액의 근거가 부족하고 협동조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1억 원 감액을 그리고 15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 주신 1억 원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제가 18대 국회 때 대표발의해서 출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저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켜봤고 또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과 협업을 지켜봤는데, 당초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 이런 부분 등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지역의 자금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유령 협동조합이 너무 난무하고 사회적기업도 그저 지원되는 것을, 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한 것들을 지역기업들이 그 국가 예산만 그냥 지원받고 실제 대개 나중에 다 청산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고 철저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나 또 지방 같은 데서 원칙 등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일정 기간, 2년이든 3년이든 지원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속적인 프로그램들과 연계되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협동조합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2025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전부 삭감돼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사실은 올해 편성된 이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도 2020년이나 2021년, 2022년까지 편성됐던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정상화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보류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상임위. 동의가 안 되신다면.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상임위안 1억도 안 해요?

○강승규 위원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15억이 아니고 1억.

○강승규 위원 보류, 보류.

○조계원 위원 무조건 보류입니까, 지금!

○임미애 위원 이러면 우리 예결위가 사실……

○강승규 위원 아니, 쟁점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조계원 위원 보류하자고 상임위 소위 하는 겁니까?

○강승규 위원 예?

○조계원 위원 무조건 보류입니까?

○강승규 위원 쟁점이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협동조합하고 관련해서 협동조합이 대개 양적으로 성장도

했고요, 나름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협동조합 형편없는 거 아니야?’ 이런 선입견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5년 동안 운영률을 보면 통상적인 다른 기업의 생존율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느냐? 강승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영된 예산이 뭐냐? 협동조합의 운영 실태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잘될 놈들은 더 잘되게 해 주고 문제가 있는 놈들은 ‘당신들 이렇게 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이렇게 이렇게 협동조합을 잘 좀 운영을 해 봐라’라는 컨설팅하는 비용이 조금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영돼 있는 정도의 컨설팅 예산은 강승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협동조합의 방향에 100% 부합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질문……

○소위원장 한병도 짧게 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대표발의자다. 그것은 제가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취지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 의지도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 활동, 사회적 진흥 또 사회적기업,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부작용 등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그런 부분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자칫하면 이 예산을 따먹기 위한 여러 가지 현장의 행태들이 있으니 지속가능하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청년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복구시키자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상임위안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까 보류하자라는……

○강승규 위원 예, 보류하자고.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배상금 및 반환금은 24년에 전액 불용되었고 25년 9월 기준으로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없는 등 26년도 예산안 집행 가능성이 낮으므로 배상금 2800만 원, 반환금 2500만 원, 총 5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의 53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13번 인건비부터 33페이지 57번 정책품질관리(기획예산처)까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해당 사업을 전액 감액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관련 예산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증액 규모는 아직 미정입니다. 일괄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감액하되 아직 증액 규모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전부 보류하시는 걸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 감액은 하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감액은 찬성하고……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감액은 확정인데 아직 증액 규모가 있으니 증액 규모는 나중에 논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앞에 있던 6번과 7번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소위원장 한병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만 아까 6번과 7번은 이 뒤의 13번과 달리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액심사 하실 때 그 부분은 상임위의 감액 취지를 감안하셔서 증액심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당연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에는 50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지출 감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기타민간차입이자상환입니다.

이 사업은 공자기금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차입금액, 적용금리, 일시차입기간 모두 과다 산출된 문제가 있어 3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의 30억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기타경비(총괄계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발행량을 2배 이상 증가시켜 예산이 과다 편성된바 감액이 필요하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판

매대행 수수료율이 과다 책정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규모는 27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의 27억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 포함)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재부는 신규발행국채에 대한 편성금리를 3.0%로 산출하였으나 최근 조달금리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과다 편성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2.8% 금리를 적용해서 4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도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채금리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니 현재의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추이도 존재하기 때문에 보류하고 나중에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웅 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공자기금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경수로라는 게, 기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벌써 한 30년째 굴러오면서 이자만 엄청 나게, 지금 아마 액수가 엄청 커졌지요, 전체적으로? 경수로 공자기금 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 통일부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웅 위원 예. 그게 처음에 담뱃세에다 붙인다 이런 여러 가지, 복권 한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하고 공자기금에서 빌려 놓고 이자만 계속 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 가지고 지금 3조 5000억 이렇게 되지 않나요, 총액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게요 옛날에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이자를 불러와서 원리금 상환 규모가 증액돼 왔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자는 상환해서.....

○김기웅 위원 상환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원리금 총규모가 지금 늘어나지 않는 규모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이 이자를 계속 정부에서 돈을 내고 있는 건데, 제 얘기는 적은 돈도 아니고 근본적 대책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털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소위원장 한병도 그거는 따로 좀 보고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이것도 결국에는 어찌 보면 사실은 정부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부채나 마찬가지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지 세입 확보를 해서 경수로하고 관련된 부채도 정리하고 싶고 그리고 26년에 140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경수로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국가부채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사업진행컨설팅(ODA)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사후관리지원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26년에 편성된 사업 중 수원국이 미정인 사업은 26년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7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비대면 온라인서비스(개발사업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시스템 개발 완료 후 1년간은 무상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시스템 운영비를 제외한 유지보수 소요액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두 사업 합쳐 가지고 7억 4500만 원의 상임위 감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5페이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BTL 특별인프라펀드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BTL 사업의 경우 수익률이 국채이자율 수준에 불과하여 민간자본 유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간투자회사의 자본금까지 국가가 지원한다면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5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래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이것을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BTL 사업이라는 게 민간자금을 끌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BTL이라는 사업 방

식 자체가 500억 원 내외의 사업인데 주로 이렇게 지자체 사업들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개편을 해 가지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 지자체는 많은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자금을 해 주시면 실제로 지자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민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도 있고 양수점장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셔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차관님께서 지금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BTO 사업하고 BTL 사업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BTO 사업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설비 30~50% 국고 지원하는데 SPC 자본금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좀 과도한 중복 지원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BTL 보세요. 수익률 자체가 국채 이자 수준에 불과해요. 민간자본 유치 자체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지자체가 할 곳이 많다고 차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깐 그것을 믿는다고 치더라도 건설비도 융자하고 수익도 안 나는 SPC 사업 자본금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이것은 차라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꼭 굳이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민간사업으로 그것을 유도한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약간 이게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BTO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BTL 같은 경우는……

○김대식 위원 BTL, BTL.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BTL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요. 이것을 이용료 형태로 매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 차이, 그러니까 이게 운용 비용에 있어서 똑같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운용 비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BTL 방식으로 하게 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국가채무가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돈을 지금 굴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공익에도 기여가 되는 쪽으로 돈을 굴리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BTL로 해서 이자율이 다소 비싸더라도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자율이 똑같으면 이것은 판단할 필요도 없이 BTL 사업이 가능하면 BTL로 추진하는 게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다는 측면, 국가적인 필요성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민간 참여가 있을까요? 나는 굉장히 저조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수익률 자체가 문제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아니요. 지금도 있지요. 지금도 BTL 사업을 하려는 사업체들이 많고요. 어제하고 그제도 기억하시겠습니까마는 BTL 한도액 증액하셨던 것 생각

나지요?

○김대식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민자적격성 검사 통과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상수관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BTL 사업으로 많이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BTL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게 결국은 BTL 방식으로 사업이 완공이 되면 이 시공을 했던 업체가 턴키방식으로 운영·관리를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턴키방식으로 운영·관리를 넘기더라도 지방정부가 계약 관계에 있어서 좀 동등한 위치에서, 그래서 비용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방금……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강승규 위원님 말씀 듣고 차관님……

○강승규 위원 아니, 답변하시고 제가……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강승규 위원 차관님, 답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방금 위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계약관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제안이 민간의 참여 유인을 심각하게 떨어뜨리지 않고 그리고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불평등한 관계다 그런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강승규 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BTO든 BTL이든 이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강승규 위원 SOC든 그게 환경시설이든.

그런데 BTO는 민간이 건설을 해서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운영 수익으로 투자금을 보전받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강승규 위원 그런데 대개 그런 것이 SOC, 터미널, 터널 같은 것 이렇게 하는. 그런데 BTL은 이것을 민간이 투자해서 소유권을 넘기고 리스를 하다 보니 이자율 정도 가지고는 투자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없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강승규 위원 그래서 BTL 사업이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BTL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BTL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하는 새 회사

를 만드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에다가 민간이 투자를 꺼려 하니까 투자금의 90%를 대 준다는 거지요? 지금 이 예산편성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5% 출자를 한답니다.

○강승규 위원 5% 출자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강승규 위원 SPC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90%를 대 주는 게 아니고요.

○강승규 위원 90%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김대식 위원 5%. 5%인데 90%까지 지원한 거야. 사업비 대비 5%인데 90%까지 지원한 사업.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5%인데…… 아니, 자본금에. 제가 그랬잖아요. 물어봤잖아요. SPC에 출자금의 90%를 정부가 지금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 우리 조사한 것은 그렇게 나왔는데. BTL 사업자의 자본금의 99%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금을 갖다가 건설 기간 중과 운영 기간 중에 5%를 갖다가 유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소·중견기업이다 보니까 5%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이 나왔던 내용이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5% 돈이 너무 큼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펀드를 갖다가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90%……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팩트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5%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사업비가 100이라고 하면 5%는 자기자본을 유지를 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BTL 펀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5%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강승규 위원 BTL 사업이 유지되는 한 자기자본 5%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5%를 정부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예, 맞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SPC 건립할 때는 누구 돈이 들어가요?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SP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주단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선순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자본금 5%도 유지 못 하는 회사를 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5%까지 지원해 줘요?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유지는 할 수 있는데 어렵다는……

○조정훈 위원 그냥 발주를 하지……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팩트 체크를 하는데 BTL, 제가 이 말이 틀린 거예요? BTL 사업자 자본금의 90%까지 지원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그 자본금이 사업비 대비 5%밖에 안 돼요.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답변을 하는데, 자본금의 90%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장 신대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이 되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90% 정도까지 하는 것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BTO든 BTL이든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되는데 처음 초기 투자 SPC에 90%까지 지원해 주는 게 무슨 민간투자냐 이거예요. 이게 민간투자 유치하는 거냐 이거지.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액하자는 주장인 거잖아요. 이걸 있으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제가 오류 하나는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무슨 민간 유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자기자본의 5%가 돼야 되고 이 5%의 몇 퍼센트까지를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한다라는 얘기랑 별개로 95%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민간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것과 다른 게 SPC 자금을……

○소위원장 한병도 그건 나중에 토론하시지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감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이자상환입니다.

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타이자상환 사업에 편성된 자산운용 위탁수수료 예산을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이관하기 위해 기타이자상환 사업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기금운영비 사업을 신설해서 여기로 326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증감 연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7페이지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감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025년 공사비 중 5억 1500만 원을 세목조정 해서 위해성평가 용역 비용에 충당하고 26년 기금운용계획에서 동일하게 5억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의 5억 15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58페이지 2번 법무부 기타 청사시설 리모델링입니다.

내역사업인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미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2억 2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의 2억 2500만 원 감액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59페이지는 철회가 됐습니다.

8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응기금입니다. 지출 감·증액사업 4건 있습니다.

먼저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기후특위에서 우리 위원회로 기후대응기금 의견 제시의 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양 간사님 간에 기후대응기금 감액심사 시 동 의견 제시의 건을 참고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기후특위의 의견 제시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산업은행 출자(녹색금융)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해상풍력, 수소인프라 등은 대규모 사업으로 대기업·대형펀드와 연계되어 있어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 사업 추진 여부를 좌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5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후특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 10번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기후특위에서는 26년도에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총 5437MW 규모로 600MW 수준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므로 9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

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기후특위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증액 심사할 때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 기후특위라도 증액 논의는 여기서 지금 안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증액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앞으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30년까지 43조 원 투자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 예산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보유한 대기업 컨소시엄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이것이 충분하게 그걸 해야 되지만 중소기업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이 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만이라든지 일본에 보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너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알찬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하실 말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대기업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해상풍력 이런 사업이 대개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이 일단 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법인세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필요한 투자를 하게 되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이런 걸 해 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야 같은 경우는 대기업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대기업 자체적으로 R&D를 100% 하거나 관련된 부품을 전부 다 생산하는 대기업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 할 때 그 밑에 깔려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된 부품업체가 2000개도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중소·중견기업이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은 공정위 차원에서 철저히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간사님 말씀 듣고……

○김대식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미 대기업들 자체가 30년까지 43조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세워져 있는데 여기다가, 물론 여러 가지 R&D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 예산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이미 돼 있는데 여기에서 국가 예산이 꼭 지원을 해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자,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라 이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이게 대기업들이 이미 43조를 투자하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은 해상풍력이나 이런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들이 추진되는 구조를 보면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회사들이 투입하는 돈은 지분투자금액으로 들어가고요. 그거랑 별개로 보통 한 8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해상풍력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초기 단계고 여기에 같이 투자되는 수소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초기 단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선순위 80% 자금의 조달이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편당깁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 편당깁을 메우기 위해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이렇게 신규, 그러니까 좀 초기 단계의 사업, 정책적으로 진흥할 필요가 있는 초기 단계 사업에서 항상 이렇게 산업은행의 정책 자금이 들어갔었고요.

사실 지금 이게 해상풍력이나 수소 인프라 같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녹색금융인데 지금 석탄발전소가 새로 지어지는 게 없어서 최근에는 없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사실은 산업은행의 자금들이, 석탄발전소 짓는 데도 이렇게 정책금융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감액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내용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요.

지금 이거 특위에서 900억 원 증액 내용이 있고 감액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증액심사 때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위원장님, 증액 때 이 내용을 논의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이소영 위원 논의를 못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왜냐하면 질의나 상임위 예비검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아까……

○소위원장 한병도 특위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이소영 위원 기후특위는 의견 제시만 가능하고 상임위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것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보류하시는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좀 요청을 드리건대 이게 대기업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해상풍력의 가장 중요한 재킷을 만드는 유명한 우리나라 기업이 중견기업입니다.

○김대식 위원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해상풍력의 현장에도 직접, 핀란드도 가 보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보면 팜스프링스라는 곳도 가 보고 신항도 가 보고 다 했어요.

○이소영 위원 이것 원안 유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강구하고 생각해서 예산을 짜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간사님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취지에 공감을 하시는데, 그러면 원안 유지?

○김대식 위원 예, 취지는 공감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그러면 이거 원안 유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면서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9페이지 2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세 번째 줄입니다.

단순 시설개선 위주의 사업임에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강좌 개설 등 신규 항목이 추가되는 등 사업 확대가 과도하므로 388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과 2268억 8000만 원 증액의견, 181억 9000만 원 증액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후특위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7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존 사업 대상을 410동으로 했는데 490동이 추가돼야 하므로 예산 175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바로 다음 페이지 칸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시그니처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181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NDC 2035에서도 사실은 건축도 중요한 분야고요, 건축에서 성과를 내야 2035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지금 정부예산이 공공건축물 중에 노후건축물 410동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의무화 사업까지 포함하더라도 560동인데 우리 공공건축물 중에 노후건축물 비중이 85%고 에너지 효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요. 앞으로 3000㎡ 이상은 의무화가 되고 그 이하의 중규모·소규모 건물들도 NDC 목표를,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그 로드맵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560동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최소 내년에 1000동 정도의 공공건축물은 리모델링이 돼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야 건축 부문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한 양을 그래도 비슷하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2000억 원 이상 증액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냈는데 감액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부분을 맞추기 위한 최소 양도 안 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감액에 대해서는 입장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3개 의견이 있는데요. 감액안, 원안 유지 그다음에 증액안 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두 분만 말씀 듣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어차피 증액이 있으니까요.

○조계원 위원 이것 윤석열 정부 때 낸 목표 아닙니까?

○김대식 위원 이것 보류해 가지고 의논하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미래환경투자펀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페이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1페이지 3번……

○소위원장 한병도 92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2페이지하고 기타특이사항이 1건만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빨리 속도 내서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1페이지 3번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조성 펀드의 잔존 투자금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출자금 증액 실효성이 낮으므로 3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특위에서 6페이지 12번,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해서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계속해서 펀드 관련된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 분야야말로 펀드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재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임미애 위원 원안 유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계속해서 펀드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투자율이 55.3%에 불과해요. 이게 실제 투자 집행이 매우 부진하고.

또 이 펀드 주목적이 환경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70%에 불과하다. 그러면 70%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60% 출자하는데 사실상 민간투자분 40%, 대부분 30%는 환경과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 비효율적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분할 납입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예산집행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22년 말 청산하기로 한 1호 펀드 원금 200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지금 김대식 위원님이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는, 1호 펀드 청산한 자금이 있는 것 아니냐, 122억원이 청산된 것 맞고요. 그래서 그 자금이 회수돼서 정상적으로 재투자되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 문제 제기해 주신 것 중에 ‘투자가 아직 안 된 게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가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모펀드로 줄 돈 다 뺐고요 모펀드에서 자펀드로 줄 돈 다 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자펀드에서 기업에 주는 돈을 원래가 1년에 다 쏘 주지를 않습니다. 4년에 걸쳐 가지고 쏘 주기 때문에 자펀드에서 기업으로 가는 게 4년에 나눠서 가다 보니 외견상으로 볼 때는 집행이 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얘기 주신 것 중에 환경산업 아닌 기업에 뭔가 투자되고 있는 것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환경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환경만 하는 기업도 있고 환경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다른 분야까지 같이 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은 최소한 환경에 70% 이상 하는 업체만 펀드의 투자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이게 환경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3일차 심사하면서 앞서서 모태펀드 관련된 건 다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 보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류로 하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기후대응기금 마지막입니다.

92페이지 4번 사업재편 지원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후대응기금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20%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해 46억 1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후특위의 의견 제시는 유인물 8페이지 18번입니다.

호남권 및 대경권 현장밀착형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2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 7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 심의 결과가 원안 유지하고 부대의견 채택인데요. 상임위 심의 결과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92페이지,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사업.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92페이지인데 상임위 의견 자체가 원안 유지니까 특별히 올라오지 않은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 의견이 원안을 유지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부대의견은 뭐냐? 블라블라블라 해서 기후기금 설립·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회계에의 이관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재관 위원 관련해서 지금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의 의견이 있던데 이견 증액 때 심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재관 위원 그리고 용도를 산업부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고 하는 그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이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아니, 제가 이 감액 요구를 한 취지 자체가, 기후기금이라는 걸 일부러 법을 제정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규모가 2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런저런 사업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컨설팅해 주고 막 이런 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기금에서 실제 목적에 맞는 용처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기금에 적합한 사업은 아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기금이 구성돼야 된다는 취지고 이걸 일반회계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저의 취지고요.

○송기현 위원 부대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이소영 위원 그런데 부대의견을 그렇게 단다고 해서 26년부터 기금에서 이 돈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그렇지요.

○이소영 위원 앞으로 추후에 2027년 예산안 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6년에 2조 언저리밖에 안 되는 기금에서 이런 돈이 사용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당장 올해부터 이관이 가능한지 보고……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아까 부처 안대로 원안 유지하고 그러면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증액 의견이 있는데……

○송기현 위원 원안 유지가 아니고 증액 의견이 있으니까 보류해야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것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입니다. 간단한 건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마지막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20페이지 기획재정부 기타특이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 비목 변경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네 번째 줄의 끝부분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사업출연금

비목을 전액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상임위 의견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상임위의 비목 변경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끝났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입니다.

○**국가데이터처기획재정부담당관 이진석**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진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22페이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통계인재개발원 교육비 및 시설 사용료 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고 통계생산대행 수입액이 세출액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수입 증액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경제총조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거 경제총조사 고용부담금에서 매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므로 고용부담금 19억 3000만 원 중 3억 3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24페이지 2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그다음 125페이지 3번 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제노동기구 파견은 25년 말로 중단될 예정임에도 26년 예산안에 ILO 파견자 주택임차료 및 의료보험료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125페이지도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같은 취지로 ILO 파견자 재외근무수당 1억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국가데이터처는 ILO에 파견하지 않나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파견은 이번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다른 부처는 파견을 하는 것이고 국가데이터처는 파견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ILO는 파견으로 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국제기구에서 채용하는 건으로 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임미애 위원 ILO가 채용하는 걸로?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예, 채용을 하는데 저희는 어플라이(apply)를 했는데 아직, 그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26페이지 국가데이터처 마지막 사업입니다.

국가통계 정책추진입니다.

첫 번째 칸의 내역사업인 통계기준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매년 해외자료 번역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인쇄비 등 해외자료 번역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거나 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3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장 안형준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처 관계관계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차장 이성진입니다.

○국세청기획조정관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30페이지 국세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4건, 감·중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납부고지서 등 발송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의 경우 예산 절감을 위해 발송 방식이 변경되면서 평균 발송단가가 낮아졌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5억 9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세유형전환 업무조정 예산은 업무 이관에 따라 절감되는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5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32페이지 2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의자 단가를 조달청 나라장터의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의 평균인 28만 5830원으로 낮추고 이를 반영하여 1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33페이지 3번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고시입니다.

내역사업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을 적용해서 예산액을 산출했는데 25년도 예상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아닌 25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2.0%를 적용하면 26년도 예산액은 29억 8200만 원이 나오므로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34페이지 4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 3분기 실적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재산출 시 9억 9300만 원이 도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35페이지 국세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관련 법적 근거인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과 조직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125억 47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73억 1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세청차장 이성진 저희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압류재산 공매의 내역사업 중 하나가 지금 국세 체납관리단인데요. 국세 체납관리단, 내용을 봤더니 기간제근로자 500명을 채용해 가지고 이 500명이 모든 체납자를 한 번 이상 방문해서 체납 유형을 분류하고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다는, 이 내용은 맞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이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뭐니까? 목표 회수액이 있으세요, 아니면 체납률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체납된 세금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건 우리 재정건전성과 또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정훈 위원 정확하게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정책목표가 체납으로 인한……

지금 국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110조 원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125억 들이면,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형 체납하는 건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제도가. 그렇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조정훈 위원 지금 이 제도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액체납자들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액체납자라고 했을 때 그 소액체납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소액체납이 아니고요. 저희는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유형 분류를 해서……

○조정훈 위원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장님.

국세청은 최근 소액체납자가 급증하면서 체납추적팀 업무가 과중해졌기 때문에 체납관리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이걸 소액체납자 때문은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절차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런데 그것이 실태확인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일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맞춤형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실태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건 일회용…… 그러니까 올해만 유지하는 겁니까, 앞으로 상설조직으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일단 해 볼 생각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명 이 500명은 어떤 사람을 고용합니까?

○국세청차장 이성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인데 무슨 전문성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고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특별히 어떤 그런 걸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소액·고액 체납자 방문해서 전수 실태조사하고 징수 행정명령을 강행해서 여러 가지 조세징의를 실현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체납정리를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조정훈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국세청차장 이성진** 실태확인……

○**조정훈 위원**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아니,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모든 체납자에게.

○**국세청차장 이성진**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 ‘모든’이라고 썼잖아요. 맞지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이거 비현실적이고 이 500명 기간제 그냥 공공일자리 창출한다 그랬는데 차장님 더 잘 하시겠지만 이거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업이에요. 아무리 체납했지만 개인이고 국민이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국세청 직원이라 그러고 갈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준비도 안 됐고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절차는 이미 다 진행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얼마라 그러셨지요, 체납액이?

○**국세청차장 이성진** 110조입니다.

○**조정훈 위원** 110조의 상당 부분은 고액체납자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빅피쉬를 잡아야지 증세가 되는 건데 이런 소액체납자,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장사 안 돼 가지고 폐업하는 상황인데 500명 풀어 가지고 경험도 없는 사람 전수조사시킨다 그러면 저는 이거 민란 일어날 것 같은데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일단 위원님, 말씀 좀 드리면……

○**조정훈 위원** 이거는 완전히…… 오늘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해 주세요.

○**국세청차장 이성진** 실태확인을 실태확인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일은 실태확인을 하는 겁니다. 생활수준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납부 의사가 있는지 이러한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저희 직원들도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사실 확인을 토대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 분류를 해서 맞춤형 체납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소액자들에 대해서는, 소액체납자나 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거나 지금 조세소위에서 심의 중인……

○**소위원장 한병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일반 세무서 방문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전 같은 국세청 직원, 고압적인 거 없고요. 세무행정서비스가 되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피치 못하게 국세를 체납하는 과정 속에서 국세청이라는 기관이 와서 체납사실을 통지하고 안내 이런 게 다소 문제가 생길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 도입 취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에도 가가지고 전기료 끊겼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실태조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안내만 해도 보통 한 1000억 정도씩, 안내 재고지만 해도 더 걷히거든요.

그래서 국세징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고액체납자 관리는 기존 조직대로 하고 기초에 관련된 일상적이지만 놓쳤던 이런 것들을 한번 한시적으로 해서 실태조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위원장님, 보류하셔서 좀 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국세청도 설계할 때 이걸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것들이라든지 좀 더 섬세하게 하는 걸로 해서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도 보완도 좀 필요하고 다른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 도입 및 예산의 의미는 동의하나 약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이명구입니다.

○관세청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기조관 한창령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들어오세요.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42페이지 관세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사업이 1건 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과태료의 지속적인 수납액 증가 및 26년도 수납 전망을 고려하여 3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관세청장 이명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4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 2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통관감시장비 현대화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실제 예정된 납입액보다 과다 편성된 소형 엑스레이 장비 임차료 2억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관세청장 이명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44쪽 관세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관세행정정보관리(정보화)입니다.

내역사업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향후 관세행정시스템 재구축 시점에 AI 설계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행정 AI 플랫폼 구축 ISP 수립을 위한 예산 8억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과 4억 5100만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관세청장 이명구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관세청 관세행정시스템이 지금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게 되지요?

○관세청장 이명구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이미 기존 고도화 사업과 장비교체 예산이 반영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추가로 AI……

계속 AI가 나오는데, AI가 뭐 만병통치약처럼 되는데 ISP를 편성하는 것은 시급성이 낮고 중복투자 우려가 크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청장 이명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설명 올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들었는데 AI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변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개편했기 때문에 향후 또 전면 개편하려면 한 7년 후의 일이 되게 되는데 그때 AI라는 부분을 장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김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중장기 과제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중장기 과제지요? 중장기 과제 아닙니까, AI는?

○관세청장 이명구 중장기 과제라기보다는 지금 ISP 사업을 내년도에 과연 어떤 분야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설계해서 바로 본 시스템 위에 추가로 탑재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차세대 관세행정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때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청장 이명구** 위원님, 다시 한번……

○**김대식 위원** 왜 이것 추가를……

왜 그러냐면 2023년, 2024년 수행된 연구용역 컨설팅 결과를 보니까 ‘충분히 소화·정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도의 ISP 예산을 또 편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그칠 것이라고 했는데 재원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세청장 이명구** 최근에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 직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정책,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AI를 활용해서 분석 시간도 단축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 이런 부분들도 자동화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그 부분을 추가하는 그런 개념……

○**김대식 위원** 추가로 탑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추가 탑재하는데, 그래서……

○**관세청장 이명구** 추가로 탑재를 하는, 모듈 자체를 탑재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관세청에서 한 것은 향후 차세대 시스템도 논의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AI 설계를 하려고 하면 일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세청장 이명구** 차세대 시스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3개년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5월 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향후 차세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년 내지 7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AI 모듈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은……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게 시스템이 완성됐잖아요. 얼마 전에 됐잖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정리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얼마 전에 됐는데 그것을 또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AI가 요즘 대세니까 그 AI라는 이런 명목하에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김대식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세청장 이명구**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2018년부터 AI 모듈을 계속 개발해 왔었습니다. 한 10개 분야에 저희들이 2018년부터 계속 모듈을 개발해 왔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위원장 한병도**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님 말씀 듣고 듣겠습니다.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위원님 말씀하는 것하고 관세청 얘기하고는 자꾸 겹도는 것 같은데 지

금 현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당분간은 적어도 말씀까지는 7년 동안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시잖아요. 그렇지요?

○관세청장 이명구 맞습니다.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송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몇 년 전과 올해 비교하면 들어오는 물품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관세청장 이명구 예.

○송기현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결국……

청장님이시지요?

○관세청장 이명구 예, 청장입니다.

○송기현 위원 청장님이 잘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보류하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관세행정이라는 게 들어오는 물건도 있지만 또 미국 관세 협상에서도 불기 때문에 또 가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요. 결국 이게 AI라는 말이 어렵고 약간 인위적이라서 그렇지 관세 데이터가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시스템화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잘 조율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그래서 과도한 물량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나 총기류 같은 반입을 막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된 시스템의 고도화에 응하는 AI 관련된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끝났지요?

관세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조달청기획조정관 이형식 기획조정관 이형식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어서들 오세요.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52페이지 조달청입니다.

조달특별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3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시설계약 사업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추가 공공주택 확대에 시설공사·기술용역 금액이 2.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수수료 수입 49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53페이지 2번과 3번 사업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계상되고 있으므로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3번,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도 같은 이유로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둘 다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조달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2건,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조달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조달청은 조달전문교육 교육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위한 포상금 8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침상 포상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관련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입니다.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의 셋째 줄입니다. 시험사용 이후 후속 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 효과성 검증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26년 증액분 6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액 사유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KOTRA의 협조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실증 참여한 기업의 참여 전후 연평균 수출실적을 비교하면 약 17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해외실증을 실시한 44개 제품, 그러니까 1년 이상 경과된 44개 제품에 대해서 최초 해외실증을 실시한 국가에서 다른 공공기관이 추가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이 해외실증 사업은 효과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성에 대해서 기업들이 신뢰가 높아져서 근래에는 이 신청 건수가 10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더군다나 이 사업은 수혜자가 90% 이상이 지금 벤처와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지금 효과성은 검증됐다고 하나 제가 조달물품 관련해서 몇 차례 민원인들의 민원을 제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러이러한 조달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청이 추진하려 하는 사업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하거나 민원을 들어 줄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조달 사례가 10년 전, 20년 된 그런 기존 관행을 계속해 오면서 이유를 그렇게 댄다는 거지요.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해외실증이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 있다 그러지만 실제 업체에서는 조달청만큼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변하는 것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런 경우에도 계속 기존의 입장만 반복한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조달청장 백승보**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혁신조달사업은 지금 시행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해외실증 사업은 더군다나 202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 추가로 공급한 계약을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기업들이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지 구매한 기관에게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해외실증 실적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KOTRA 보고서 등을 저한테 제출하고 이것 보류해서 나중에 제가 추가의견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예, KOTRA 자료를 포함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보시고 나중에 그러면 감액 의견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강승규 위원** 예, 철회하든지……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조달청은 강승규 위원님 자료들을 빨리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조달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R&D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예산 낭비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20억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50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업의 감액 사유는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성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R&D를 하는 방식은 기존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제품들을 스케일업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이후로 저희가 15개 과제를 선정했고요. 그중 7개가 완료가 되었는데 7개 과제 모두 지금 제품 개발까지 완료가 되었고 그중의 6개 과제에 대해서는 국내의 공공 구매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한 지가 지금 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완료된 건이 많지는 않지만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성과가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저희가 이 스케일업 R&D 방식은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나 과기정통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혁신제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혁신제품에 대해서까지 이 R&D를 확대 적용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먼저 듣고 다음 조정훈 위원님.

○김대식 위원 청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혁신제품 기술개발 예산이 있잖아요. 23년도에 17억에서 24년 18억, 25년 29억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26년 예산을 보니까 갑자기 3배 이상 폭등을 했어요, 100억. 그런데 성과는 전무하단 말이지요. 23년 사업 추진 이후 현재까지 지원된 과제 중에서 시제품 제작이나 국내 판로 개척 이어진 사례가 전무한데 어떻습니까? 전무한 상태잖아요.

○조달청장 백승보 그것은 전무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과제 모두가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공통요구자료를 제출할 때 실적 부분들을 누락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서요.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락이 되니까 우리가 봐서는 전무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적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7개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래서 혼란을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갑자기 3배 이상 띄우니까 예산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실수했다고 인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건 저희가 분명하게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제 원안 유지해 주시는 건가요?

○**조정훈 위원** 청장님이시지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조정훈 위원** 실수하신 것은 이 사업을 했다는 자체가 실수예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 조달청에서 R&D를 합니까? 조달하는 단체 아닙니까? 조달하는 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을 위해서 서비스와 제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전문으로 하라고 만들어 준 기관이에요. 오피스 오브 프로큐어먼트(office of procurement)잖아요. 거기 R&D 기능이 어디 있어요?

○**조달청장 백승보**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 R&D 예산이 지금 분야는 제가 받아 보겠지만 과기부에도 R&D 예산이 수십 조 있고 각 부처마다 R&D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조달청에서 R&D를 하고 앉았습니까? 이게 진짜 맞다고 보세요, 기재부차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조달청장 백승보** 위원님, 조달기관에……

○**조정훈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시다.

기재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청이 R&D 하면 그러면 국세청도 R&D 하고 경찰청도 R&D 하고 R&D 예산은 다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조달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 굉장히 협의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조달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조정훈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조달청에서 할 수 있는 R&D는 최대한 확장해 봤자 전자조달 또 조달하는 정책 이런 것 R&D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책연구고 기술연구지 여기 보면 시범규모연계형, 스케일형 각 사업체 또는 개인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5억 정도씩 주면서 살 만한 물건을 만들라 이걸데요. 이렇게 돈 낭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

국가란 정부조직이 있습니다. 정부조직에서 어떻게 과학기술과 상업성이 있는 R&D를 하는지…… 각각의 영역이 있어요. 과기부에서 농업정책 하면 안 되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하면 안 되듯이 조달청에서 무슨 R&D를 하느라고 100억을 달라고 합니까? 이걸 그 리고 턱턱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청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첨단혁신기업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수요를, 공급처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요, 청장님?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산업이 지역의 큰 산업인데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제품을 만들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조달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공공부문. 그렇지요? 청장님, 그런 것 많이 들으셨지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래서 그 조달이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도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서 조달 관련된 그런 사업 스폰서를 통해서 그 제품을 사 주면 이제 그걸 공급하는 수요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은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생기는 공공구매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조달청이 가장 정보를 잘 알고 있잖아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해외 조달에 관련된 부분은 마찬가지로 조달청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창업기업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레퍼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수요를 만들 수 있고 공급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런 데서 조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혁신산업이야말로 조달청에서 나서 가지고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술 창업을 위해서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한 데가 조달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특히 저희 원주는 의료기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공립병원에 대한 조달이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굉장히 경쟁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조달청장 백승보 다른 지금 R&D 사업 같은 경우는……

○송기현 위원 아까 7개? 7개 했대라는데……

○조달청장 백승보 3 대 1 정도 경쟁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3 대 1.

○조달청장 백승보 그런데 저희 지금 R&D 사업은 10 대 1 정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10 대 1. 그만큼 수요가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정책 수요가.

○조달청장 백승보 예.

○**송기현 위원** 다만 이게 갑자기 칠십몇억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지적인 정도 수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달청장 백승보**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송기현 위원** 저도 증액 의견을 냈지만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지적인 정도 수용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달청 의견은 어떠세요?

○**조달청장 백승보** 일단 조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전통적인 조달의 개념에서는 그 부분이 맞고요.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같은 거는 최근에는 수요를 발굴해서 그 제품들을 조달하는 것도 새로운 정책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조달청이.

○**소위원장 한병도** 내용보다도요 방금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조달청 의견을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상임위안.

○**조달청장 백승보** 상임위 의견 20억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수용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정리하시지요.

○**강승규 위원** 아니지. 아니, 아니야.

○**조정훈 위원** 아니, 20억 가지고 안 된다니까…… 저는 아까 송기현 위원님 말씀에 200% 동의합니다. 그건 R&D가 아니에요. 의료단지에서 발굴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줘서 국제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그건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R&D입니까. 제품 개발에 조달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송기현 위원** 그게 애초에 처음부터…… 잠깐, 죄송한데 해외 조달을 하려고 하면 해외에서 조달의 여건에 맞는 여러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조달청이 협력을 해서 해외 공공구매에 맞도록 기업하고 협력을 해 주고 거기에 맞게 기업에서 그것을 개발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해 주면 엄청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R&D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수요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소위원장 한병도** 이번에는 아까 박민규 위원님께서 손 들어서요 그다음에 강승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조정훈 위원님께서 조달의 전통적 정의와 또 R&D 정의에 맞춰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시고 좀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여기서 그냥 차라리, 수용도 했는데 20억 감액으로 와서 정리되면 나중에 또 먼밀하게 하다가 또 다시 100억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제안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송기현 선배님께서 말씀 정말 잘해 주셨는데 해외 조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달청이 관련돼서 실증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도, ‘이거 조금만 R&D 하고 조금만 바꾸면 될 텐데’라는 것을 또 다른 혁신제품 지정하는 다른 부처에 가서 ‘이것도 해 오세요’ 하면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업이야말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이 해외 실증사업과 똑같이 수혜받은 기업들이 기술·벤처 및 스타트업이 90%라고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거기 관련해서 너무 예결소위가 그동안 다 보류로 넘어갔으니까 이번 건은 조정훈 위원님께서 조금 수용해 주시면 20억 감액으로 정리되고 아니면 또 소위로 넘겨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는 조정훈 위원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조달도 시장입니다. 조달도 시장이에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조달기관에서 R&D를 한다. 해외 제품의 어떠한 부분들이, 해외 어떤 정보가 좀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제품 등이 필요한지 등을 R&D라는 명목으로 한다면 자칫 시장에 개입하고 특정 업체에게 유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은 조달 방법에 대한 혁신적인 건지 모르지만 해외 시장의 조사를 하고 거기의 어떤 부분에 시장에 개입하는 듯한 R&D는 자칫 조달 시장의 시장 기능을 무너뜨린다고 저는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확인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제시한 20억 감액안에 대해서 입장만 이야기해 주시고.

○조정훈 위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아까 김대식 위원님이랑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이에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예,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끝났지요?

조달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인데요, 차관이 지금 산자위 법안소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처, 중기부부터 그다음에 기후노동위원회 소관 부처까지 심사를 마친 후에 산업통상부 소관 감액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차장 목성호입니다.

○지식재산처기획조정관 구영민 기획조정관 구영민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 자료 6권입니다.

소위 자료 6권의 99페이지 지식재산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 사업 1건이 있습니다.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국민으로부터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투자비용 대비 실적이 부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52억 5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23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식재산처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이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처로 승격됨에 따라 2026년도에 대폭 확대 개편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하는 사업인 반면 중기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구체적 제품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양 사업은 상이합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아이디어를 중기부 창업지원 사업과 후속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까?

○조정훈 위원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올해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년 처음입니까?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올해까지는 특허청 차원에서의 아이디어 공모만 하고 있었어요.

○조정훈 위원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니까 똑같은 거지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그러니까 저희 청 차원에서 아이디어만 공모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19개 범부처와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허청 그리고 새로 한 지식재산처 안에서만 모두의 아이디어를 공모했다는 뜻입니까?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특허청 직원들만 상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는 뜻인가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아니요. 특허청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요 기술적 아이디어 중심으로 해서 주로 국민들을 상대로 아이디어를 모았다는 말씀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관련된 게 얼마였지요? 110억이지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110억 썬 가지고……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아니고요, 11억……

○조정훈 위원 11억. 11억 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자랑할 만한 아이디어 뭐 하나 좀 얘기해 보시지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금 저희들이……

○조정훈 위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지금 철도에 가 보시면요 철도, 코레일 같은 데 가 보시면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전에는 굉장히 무거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들고 다니셨 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 결과 지금 보시면 평소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 형태로 갔다가 그거를 열차에 올라 타실 때는 좀 간편하게 들고 가셨다가 하는 식으로 개편된, 그런 사 업들이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조정훈 위원 그거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아이디어 자체를 거래하고 사업하는 거에 관해서 저희들한테 소관이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기능이 마구마구 헛갈려요. 아까도 오시기 전에 조달청에 대해서도 R&D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부처 아닌 청 단위, 지식재산처가 되긴 했지만 너무 영역을 넓히시려고 하는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요.

지식재산처 저는 지지합니다. 제가 산자위에 있을 때도 특허라는 권위주의적 이름 대신 지식재산처로 가라 동의했고 아마 특허 관련된, 장롱 특허가 아닌 실질적 특허로 운 영하는 거 저는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지금 얼마 쓰겠다고, 82억 원을 써서…… 지금 이게 나와 가지고, 특허 숫자가 모자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허문화를 지금 국민들에게 확산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하자고 80억을 써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빚내서, 국채 우리가 얼마나 발행하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수백조 발행해서, 빚 내서 공모전 하자고요? 우리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지 정말 혁신적인 무슨 뭐가 나올 거 라는 보장도 없이 너무 모호하잖아요. 형편 좋을 때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적자 예산이 라고요.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쓰지 마세요.

지식재산처 이름 바꿔 드렸으면 정말 업의 본질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가 많고 본질을, 정말 쓸 만한 특허 하나 없는 장롱 특허라는 비아냥 이걸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이게 지식재산처 핵심이지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해서 82억 날려 버리면…… 뭐 하나 갖고 오실 겁니까, 연말에? 그러면 이번에 다음에는 무슨……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특허가 사업화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보통 저희들이 대학이나 공공연 같은 경우에는 높지 않습니 다.

○이재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비율이 높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걸 다시 돌려서 생각해 보면 특허는 냈는데 그것이 실

생활에 활용도가 적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화가 안 되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오히려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티브로 해서 특허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사업화하게 된다 그러면 어렵게 특허된 부분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하나의 어떤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지요, 보류.

○송기현 위원 보류합시다. 원래 증액해야 된다는데, 증액한다는 걸 또 감액하니까 완전히 달라져서……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이 지식재산처에서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지식재산처차장 목성호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정부를 표방을 했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모두가 저마다의 뭐랄까, 적극적인 참여라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러는 거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그 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이거는 밀어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강승규 위원 지식재산처의 본래 업무가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하지도 않고 국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거기서 지식재산화하는 특허 등록을 하는 데예요. 공모한다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예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 사업 보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해 보겠다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국정과제로서 하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막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지식재산처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지식재산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1차관 노용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2차관 이병권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6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3건,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옴부즈만 운영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옴부즈만 업

무 대부분이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중간 전달자의 역할에 그치고 있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읍부즈만 통합 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상임위 감액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7페이지 2번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1억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입니다.

인공지능 제조플랫폼을 제조AI 24로 고도화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제조AI 24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관련 6억 5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금번 예산은 지적하신 기존 사업 실효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ISP로 향후에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시 제공 데이터 현물 출자 인정, 국제표준 기반 제조 데이터 관련 기능 제공 등을 통해 데이터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것은 제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한 내용이니까 지금 정부 수용 받아들이십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상임위안으로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상임위안만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3번입니다.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입니다.

내역사업인 몽골 울란바타르 스타트업 타운 조성 및 엑셀러레이팅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단순 업무 공간의 비중이 과다하고 MOU 체결 이후 협력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0억 1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7000만 원에 불과하고 몽골 내 대규모 스타트업 허브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인프라 비용은 몽골 측이 무상 제공 예정인 대규모 허브 공간 리모델링 비용으

로 2차 연도 이후에 반영 예정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양국 간 스타트업 분야 교류는 컴업, ‘도전! K-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에 몽골 측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중소기업 ODA 사업으로 몽골에 플랫폼 조성을,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한다는데 실제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업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 정도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정도가 아닌가 보여지고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줄기차게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했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시작하기 전에 걱정됐던 사업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몽골과 상당 부분 협의가 된 거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ODA 선정 과정에서……

○이재관 위원 ODA 사업의 콘텐츠가 이러한 영역으로 된 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은 처음 하는 시도입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자금 지원이었는데 이것은 콘텐츠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국내의 어떤 관련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적극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차관님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1차관입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지적된 내용, 우선 이재관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 사업을 하기로 정부가 합의가 돼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지금 현재 ODA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송기현 위원 선정돼 있는 상황이니깐 해야 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송기현 위원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보다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강승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10억으로 쓰려고 하는 그 내용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적하신 내용 말씀 들었잖아요. 그것 답을 좀 하셔 봐요. 이게 단순히 업무 공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정도 아니냐……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송기현 위원 그러면 10억으로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10억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7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은 내년엔 반영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 반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 비용이라는 게 준비하는 작업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 10억……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려는 건지 얘기를 해 보라는 얘기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스타트업 홈페이지 구축이……

○송기현 위원 그것 7000만 원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7000만 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창업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에 7억 5000만 원.

○송기현 위원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가 몽골에……

○송기현 위원 그게 사람들 모아 가지고, 기업인들 모아서 거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창업 교육과 스타트업에 대한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생태계 간 교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송기현 위원 교류 활성화 이런 정책?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기현 위원 그게 100%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지금 몽골 측도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고……

○송기현 위원 그게 100% 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얘기지요. 그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골라 가지고 일부를 하고 일부는 진행되는 것을 봐서 강승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말씀 주신 대로 지적하신 인프라성 경비는 내년엔……

○송기현 위원 그거는 아니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반영돼 있지 않고 내후년에 반영될……

○송기현 위원 내년에 10억 돼 있는 것 중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일부 감축해 가지고 수용하실 내용이 없냐 이런 얘기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현재로서는 저희는 원안 유지가, 첫해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3년간 65억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첫해는 정부 원안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한번 위원님들께……

ODA 사업이 저개발 국가나 이런 쪽에 약간의 SOC 인프라나 뭔가 꼭 필요한 그런 시설 등을 중심으로 가 있고 지금 이것은 창업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몽골 가서 창업 생태계라든지 현장 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엑셀러레이팅을 이리저리한 면에서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한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몇 번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MOU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3년 동안에 65억 들어가는 건데 가서 건물 리모델링해 놓고 홈페이지 열고 무슨 창업 스쿨 열고 그러겠지요, 여기서 하는 그런 일대로. 그런데 몽골의 창업이라는 것이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창업진흥원 등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으로 몽골의 현지의 사업을 얼마나 알기에 건물 리모델링해서 빌려주고 홈페이지 기술적으로 IT, 코딩해 가지고 짜 주고 그리고 뭘, 창업 지역 엑셀러레이팅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창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지 특화돼야 되고 뭔가 몽골의 특색 있는 것을 발굴해서 창업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아무리 사업계획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봐도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건물 리모델링은 다음 연도부터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MOU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65억 원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사업 효과가 나는지, 그게 지금 ODA 사업의 요건하고 맞는지, 한·몽골 경제협력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인지, ODA로 그렇게 단순히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구분이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서 문제 제기는 삭감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추가로 좀 설명드려도……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이건 지금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9페이지 4번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맨 위에 내역사업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앞서 심의하신 부처에서는 전부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기부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48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사례와 같이 다 보류하고 가실 건지……

○강승규 위원 제가 산중위에서 이것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산중위에서는 산자부도 그렇고 중기부도 그렇고 일정 정도 감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중위 자체 상임위만의 의견입니다. 여기 예결소위 국민의힘 전체는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까 간사께서 점심시간에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삭감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간사 간 소소위에서 추가 삭감 등을 하든지 아니면 산중위에서 삭감한 것까지 포함해서 보류했다가 추후적으로 수치 계수조정 하시든지……

○송기현 위원 이것은 증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감액 의견만 처리를 할 수는 없고 하려면 보류해 가지고……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보류로 가지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일단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까 부처 의견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아, 상임위안?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조정훈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은 수용한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건데 더 많은 삭감을 요구한 게 있으니까, 이것은 산중위의 삭감안이고 다른 위원들 삭감 이것은 보류로 넘기자는 거지요.

○송기현 위원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더라도 예결위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한 건 다 회복해서 원안을 하든지 최소한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어서 여기 소위 자체에서는 의견이 안 되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산중위에서 삭감한 것까지 포함해서 보류로 가는 거지요.

○송기현 위원 예.

○조정훈 위원 동의합니다.

○강승규 위원 산중위 산자부 것도 그렇고 중기부 것도 그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5번 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K-뷰티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과 대동소이하므로 3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바로 밑에 3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복지부 사업과는 지역적·정책적으로 차별화돼 있고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업계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 부분도 똑같이 제가 산중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K-뷰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등과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요. 보류 사업으로 넘어가지지요.

○송기현 위원 보류는 좋은데……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먼저 말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강승규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이것 논의를 하셨다는……

○강승규 위원 우리 이것 산자중기위 상임위에서 다 한 겁니다.

○임미애 위원 상임위에서 논의했지요. 그런데 상임위 의견은 123억 증액으로 올라온 것 아닌가요?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임미애 위원 아, 이걸 다른 사업인가요?

○강승규 위원 아, 상임위에서?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러면 30억 삭감으로 의결이 된 건가요?

○강승규 위원 아니, 의결이 안 됐지, 이걸.

○임미애 위원 이걸 의결이 안 된 건가요?

○강승규 위원 아니, 의결은 상임위 전체 했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이 그냥 상임위를 통과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원안 유지로……

○강승규 위원 원안으로 상임위는 그냥 한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상임위안은 원안 유지안이에요.

○강승규 위원 예, 원안 유지지요, 상임위는.

○임미애 위원 저는 상임위……

○강승규 위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삭감한 거든 원안 유지든, 증액은 아직 심의 안 하니까, 산중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다른 논의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논의를 했지만 그건 산중위 의견이고 저희가 산중위에서 합의한 안이고 예결위 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등은 보류로 가서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자 이런 얘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그건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는 거고요.

○강승규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우리 간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송기현 위원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결정된 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추가로 내신 거잖아요?

○강승규 위원 아니에요.

○송기현 위원 아니, 여기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지금 위원장이 그걸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송기현 위원 그래서 여기서 강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철회하시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감액안을 동의 안 하시면……

○강승규 위원 여기에 감액안을 강승규만 낸 게 아니라 서범수, 이성권, 조은희가 냈잖아요.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그러니까 이 소위 자체가 이걸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장을 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펴시고 그다음에 또 반대 의견 있으면 그걸 다 토론을 하는 거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임미애 위원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상임위에서 결

론 난 것 아니냐, 아까. 상임위에서 결론을 냈지요,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그러나……

○소위원장 한병도 그런다고 여기에서 통과되는 건 아니고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그것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그것 얘기했는데. 그래서 보류……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위원님, 상임위는 원안 유지로 이 건은 통과가……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토론이.

○강승규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마케팅지원사업에 강승규, 서범수, 이성권 등이 요구를 했지요? 여기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건 강승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승규는 원안 유지로, 그 뒤에 원안 유지로 합의가 됐지만 다른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안을 철회한 것이고 그건 당의 의견에서, 당에서 다른 위원들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상임위에서는 원안으로 갔지만 추가 삭감 논의를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그걸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자, 의견을 알았고요.

송기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면 돼요.

○송기현 위원 토론은 어차피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삭제 의견을 철회 안 하시면 어쨌든 보류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라서……

차관님이 지금 계시는데 이런 사안이 많아요. 다른 부처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복지부 사업과 중기부 사업은 뭐가 다르다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복지부 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관련된 연구라든지 그걸 시장을 넓히는 사업인지, 중기부 같은 경우는 사업화를 위한 사업인지, 이런 게 대략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중기부 사업은 대개 사업화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예, 기업 지원용으로만……

○송기현 위원 기업 지원용으로.

복지부는 K-뷰티 산업 자체에 대해서 R&D 관련 예산이 주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화장품 산업 육성 사업에서 R&D……

○송기현 위원 화장품 산업 육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예결위에서 비록 강승규 위원님은 여기 들어와 계시지만 세 분은 안 들어와 계시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 강승규 위원님 포함해서 전부 우리가 합의만 하면 소위에서 이 부분 감액안은 저희들이 기각시키고 정부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같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강승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감액안을 철회하는 것에 동의 안 하신다 그러면 보류로 갈 수밖에 없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요. 이 판단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도 있고요. 결론을 여기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도 결론은 분명히 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2페이지 6번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내내역사업인 특화창업패키지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매달 고액의 월세가 지출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예산의 10%인 19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창업저변확대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에 대해 CES 해외 전시 수상이 해외 투자 유치로 이어지지 않고 정부 부처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므로 관련 예산 16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CES를 포함한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은 스타트업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고 지금 혁신상 수상 기업 중에 유치 기업이 1개사에 불과하다는 건 당해 연도 1월 달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그해 하반기에 조사한 숫자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1개에 불과하다는 거는 좀 잘못된 통계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투자 유치 지원 강화라든지 중장기 투자 성과 추적 관리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철회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정부 원안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3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정책자금지원 성과향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정책자금이자보전지원 사업에 대해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25년 대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53억 1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42페이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입니다.

이 내용은 모태조합에 관한 사항이라 나중에 일괄해서 검토하기로 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의견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한병도** 정부 의견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매우 아쉬워서 어렵습니다.

최근의 벤처시장 동향이라든지 제3 벤처 붐 확산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확대 또는 적어도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기논의했기 때문です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100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류로 넘어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43페이지 신성장 기반자금(융자)와 다음 페이지의 4번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융자)는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번 신성장 기반자금(융자)입니다.

내역사업인 혁신성장지원 사업에 AX스프린트 우대트랙 1000억 원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은 대규모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았고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고 AX스프린트 우대트랙은 본 사업인 AI응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이 구체성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융자 예산 역시 본 사업과 마찬가지로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창업 사업화자금(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창업기반지원 사업에도 앞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AX스프린트 우대트랙 1000억 원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동일한 의견으로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100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역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우리 기관은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동 우대트랙은 별도 자금 편성이 아닌 기존 융자 예산을 활용한 집행 방식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AX스프린트 사업 참여 기업 외에도 혁신성장 분야 기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므로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신성장 기반자금과 혁신창업 사업화자금도 상임위에서 격론 끝에 각각 2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안을 마련했으나 위 사안도 아까 같은 원칙에 따라서 보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자금을 편성한 게 아니라 기존 자금 범위 내에서 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꼭 이 전체가 다 AX 스프린트 사업용이라고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것을 빨리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 이겁니까? 스프린트가 무슨 뜻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산업 현장에 AX, AI 접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왜 AX스프린트라고 하셨어요? 스프린트가 무슨 뜻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1차관 노용석 AX를 신속화하게 만든다라는, 신속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훈 위원 좀 생각하고 사업 이름 지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0개 부처에 대해서, AI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개 부처에 있는 걸 다 하나로 지칭하는 이름이 AX스프린트 우대, 스프린트 300 사업입니다.

○조정훈 위원 우대, 300? 또 우대트랙도 있고……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AX스프린트 300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정훈 위원 좀 한 번만 생각하면 한국말 만들 수 있는데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면 이걸 예산을 검토하는 분들에 대한 무례함이라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한병도 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감·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소상공인성장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폐업만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에 불과하므로 5790억 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바로 밑에 9853억 6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저희 중기부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 예산은,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그저 현금을 일시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을 결코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의 자생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이 사업도 대표적인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소상공인성장 지원 관련해서 삭감 의견이신 거지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차관님, 소상공인 이 사업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올해 추경으로 약 1조 5600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이재관 위원 아니, 전 정부에서 재래시장의 상인들에 대해서 전기료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비슷한 지원 사업들은……

○이재관 위원 그 집행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처음에 6000만 원대에서 7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나중에 1억 500만 원인가요, 그 매출액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작년도에도 했었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전기료만 한정해서 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관 위원 전기료 지원 사업, 예.

그런데 이것은 전기료뿐만 아니라 가스·수도 요금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현재 절박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치 상황이 좀 어렵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경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셨고요. 현장에서는 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큰, 공과금이라든가 통신비 등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소비쿠폰과 더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지수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원래 연매출 3억 미만으로만 했던 것을 1억 400만 원 밑으로 축소시켰고요 그리고 지원금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 소상공인 대비 내년에는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약 80만 명이 탈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해 주시더라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나올 소지가 크다, 최소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관 위원** 이 사업은 최소한 정부안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먼저 듣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돈이 되면 돈을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본소득도 다 주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 차관님 말씀과 달리 현장에 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사실상 가게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지급되고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부족해요.

사실은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민생쿠폰 해 가지고 이게 소비 진작이 잠깐 되지요. 잠깐 되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은행 분석을 보더라도 물가가 또 오릅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전환 혁신 지원 중심으로 구조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돈 나눠 주는 것 같으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기재부에서 각 대상별로 세수 있는 쪽을 다 쓰면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전환 혁신 지원 중심의, 경쟁력 없는 업종은 출구전략 마련을 해 주고 또 생존 가능한 소상공인은 AI 기반 상권 분석을 해 주고. 우리가 보면 답답하거든요. 돈이 좀 생기면 치킨집 하고 뭘 하시는데 조금만 분석해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게 뻔할 집에 상권을……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 지원해 주더라도 어차피 지금 없는 재산에 사업 시작한다고 빚내고 해서 빚은 더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만 실제로 상권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덧붙여 이야기하면 중기벤처부가 쓰는 예산, 예컨대 현재 관광시장형 지원사업 이런 게 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문화관광형……

○**최형두 위원** 예,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도 있고 전통시장마다 돈을 나눠 주는 게 있습니다, 5억짜리 10억짜리가 있는데. 제가 마산 어시장에서 한번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이것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시장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두 명이 내려와 가지고 사무실을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1~2년 동안 쓰고 간, 그리고 사무실 비용이니 경비니 그 사람 인건비로 쓰고 간 돈이 4억~5억입니다. 10억 준다 해 놓고 그 동네 시장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뭘 놔의 조건만 까다롭게 해 가지고 그 시장 상인들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사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 것만 보면 될 텐데 그것 다 항목을 엉뚱하게 정해 놔 가지고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 두 명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예산 40~50%를 낭비합니다.

이런 식의, 나눠 주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나눠 준다고 해서 10억 한다고 해서 어시장이, 예컨대 관광사업이 진흥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상인들이 분노했습니다. 10억 준다 해서 좋아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동네 사람도 아닌 사람이 두 명이 와서 전문가랍시고 인건비 다 빼 가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무실 만들어서 사무실 경비로 몇천만 원 쓰고 시청과 도청도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중기벤처부답게 소상공인을 돕는 좀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조계원 위원님 먼저 듣고……

○조계원 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이 바우처사업인데 바우처사업은 결국 자기가 공과금을 쓴 만큼, 썼기 때문에 거기서 바우처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폐업한 사람이나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염려는 없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보면 연매출 3억 원 이하에서 311만 명이 이 혜택을 받았고 좋은 반응을 얻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해도 80만 명이 더 지원에서 제외되고 비용도 절반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원안이 반영돼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해서 더 갈급한 요구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원안을 유지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 혁신 전환에 필요한 부분은 따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위원님들 지적처럼 저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혁신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구조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낮춘 게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사업자 기준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좀 유연성을 줘야 될 것 같아, 유연성.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몇 가지 좀……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 지금 기계가 작동이……

잠깐 시간이 걸리니까요.

조정훈 위원님 이거 의견……

○조정훈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고……

○소위원장 한병도 마이크 없이 해도 되나?

○조정훈 위원 마이크 상관없이, 속기하시는 분도 들리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마이크 상관없어요.

○조정훈 위원 아까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해서, 작년에는 매출액 기준 3억이었는데 올해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매출액 기준이 1억으로……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1억 400만 원.

○조정훈 위원 그런데도 80만 명이 줄어든다? 왜 그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대상이 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매출액 기준을 낮춘 거지요.

○조정훈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는 경영안정 바우처가 7개 처에 쓸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조정훈 위원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보, 고용보험, 산재. 그런데 이번에 통신, 차량 연료비를 추가한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통계를 좀 요구합니다.

작년에 우리 돈 나눠 썼을 때 7개 사용처의 비율이 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조정훈 위원 그런데 일단 어디에 제일 많이 썼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가장 많이 쓴 곳은 통신비라고 파악됩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통신비는 작년에 안 됐잖아요, 통신비는 올해 들어간 거고.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유류비라고 합니다.

○조정훈 위원 유류비도 작년에 없었고요. 올해 있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이게 올해 추경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고요.

○조정훈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도 이미 9개 처였군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올해 중간에 추가된 게 하나……

○조정훈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기존에는 7개인데 내년에는 9개라고 했는데 올해도 9개였습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통신비 들어갔기 때문에 계임에 썼다고 지금 막 비판 나왔잖아.

○조정훈 위원 그러면 사용처는 변함이 없습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쓴 게 통신비와 연료비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차량 연료비가 약 32% 정도 되고요. 4대 보험료가 28%……

○조정훈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리고 전기료가 21%입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요, 이 정책의 목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기껏해야 한 25만 원, 그러니까 많이 봐야 50만 원 정도의 손익 계산함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인 겁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조정훈 위원 300만 원 버는 분이 350만 원 버는 효과가 넷(net)으로 날 수 있겠지요, 일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과연 그게 가장 중요, 이게 올해 5000억 쓰겠다는 건데,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조정훈 위원 5000억을 지원해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25만 원씩 손익 계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1회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이지요, 이것은? 매달입니까, 한 번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올해 추경을 통해 지원했고 내년 예산에……

○조정훈 위원 26년에.

○김대식 위원 1년에 한 번.

○조정훈 위원 1년에 한 번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1년 한 번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모든 사람이 질문할 수 있지요?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요 우리 중기부에서 옥석을 가리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같이 커피를 먹어도, 모든 국민이 치킨을 매일 저녁으로 먹어도 망하는 집은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많아요.

○소위원장 한병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위원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정리되게 해 주는 정책을 가지고 오셔야지 이렇게 인공호흡기만 계속, 희망고문만 해서 장사하면 망하고 장사하면 망하고, 이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통과를 민주당이 시키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대의견에 남기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 이 생태계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정책을 좀 용기 있게 던지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끝났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1차관 금한승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2차관 이호현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들 오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소위자료 7권의 3페이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타재산이자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반복되는 초과수납은 주로 대행역무비 예치 이자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므로 25년 8월까지의 대행역무비 예치 이자 수납액에 맞추어 4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증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2건 있습니다.

먼저 1번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자동유량 설치 사업에 대해 소요비용 재검토 결과 125억 9000만 원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해서 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상임위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5페이지 2번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계획변경 및 사업 지연으로 이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26년에는 공사비 등으로 약 21억 원만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므로 8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상임위 감액 의견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6페이지 3번 국가하천정비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신석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26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변경을 반영해서 3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상임위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면허 및 수수료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결산액의 평균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최근 3년간 결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1억 5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증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3페이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2건이 있습니다.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환경)입니다.

앞에서 심사하신 부처의 예에 따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도 부처 의견은 듣고서 보류하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지금 AI응용제품 말씀하시는……

○소위원장 한병도 예.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정부 원안 유지를, 정부 의견은 원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이거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연내에 완료가 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잘 알겠습니다.

보류, 보류.

○조정훈 위원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차관님, 모든 숫자가 깔끔하게 어떻게 50000으로 떨어집니까? 이게 수요조사 한 합이라고 진짜 자신 있어요? 그냥 막 넣은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아니, 아닙니다.

○조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번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에 대해 상임위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에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상임위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김한규 위원 이거는 조정훈 위원님 지역구로 옮겨요. 마포잖아요.

○조정훈 위원 귀 당 당대표 지역구시라……

(웃음소리)

(「삭감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삭감에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귀 당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네, 요구하시고. 감액하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만요.

여기 바로 강 건너 보이는 저기인데 여기가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서울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시설의 적기 준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우리 당 예결위원들이 다수, 네 분이 의견을 냈습니다.

원안 유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감액을 그냥 받아들여요?

○강승규 위원 이걸 제가 좀, 내가 조금 중립적인 의미에서 의견 좀 얘기할까요?

○김한규 위원 전직 마포구……

○강승규 위원 전직 마포 당협위원장으로서.

그런데 이 부분이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이, 기존에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마포구와 협의하면서 기존 시설에 증액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위치를 마포구와 다른 지역 등을 선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마포구의 일부 의견을 들어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리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마포구청의 일방적인 의견만 들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마포구도 반대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위치상 결정됐고 그랬지만 현재 마포구와 서울시의 굉장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래서 의견……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보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강승규 위원님, 그래서 의견이 뭐예요?

보류? 원안 유지?

○강승규 위원 제가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임미애 위원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신 거고……

○강승규 위원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인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얘기 더 들어 봐야지요. 제가 이 사안이 뭘 사안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제가 이제 조금 그 맥락을 이해하고 왜 이렇게 상임위나 등등 해서 삭감을 하셨는지도 이해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곧 마포에 제2소각장을 짓지 않으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북부 전반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당, 진영을 넘어서 어떻게든지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뺀 내면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해 주시고 좀 더 논의한 뒤에 소소위 때 저도 의견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아까 강승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신 중에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지를 확정 지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소송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지금 상임위 의견대로 삭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도 아닌 것이……

○강승규 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부지가 이미 마포구 등의 일부 동의를 받아서 확정을 해서 발표를 다 했어요.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 속에서 마포구가 다시 입장을 바꾸어서 반대하고 어찌고저찌고하면서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소송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문제이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는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서울시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소송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저는 쟁점은 있지만 이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러면 서울시의 쓰레기 여러 문제가 상존하게 된다는 거지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그래서 국민의힘은 마포구 상암동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요?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지요.

○강승규 위원 지금 의견을 냈잖아요. 여기 의견을 냈잖아요. 김위상 위원, 조은희 위원, 조지연 위원이 여기 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 삭감으로 결론……

○김한규 위원 아니, 그래서 예결위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 입장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강승규 위원 지금 조정훈 위원님이 보류해 달라 그랬잖아요.

○조정훈 위원 이게 생각보다 오엑스로 하기가 어려운 게 큰 틀에서 수도권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답을 찾아야 되고 시간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구와 주민들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돼 있어서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수용하느냐 또는 이 조건이 수용 안 되면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 5억 원은 마포 상암동에 쓰지 않으면 서울 어디 또는 경기도 어디인가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마포는 바뀔 수 있어도 쓰레기를 담을 데가 없기 때문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너무 명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보류해 주시면……

○**이재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여기 지역이 딱 특정화돼 있는 사업이에요.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마포구나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5억 원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다 매칭돼서 벌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한병도** 말씀하세요.

○**임미애 위원** 제가 이것을 삭감으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예산서에 특정 지역으로 이게 명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조정훈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서울에서 배출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해야지요. 저는 이게 경기도나 경북이나 이런 데 오는 것 반대합니다. 서울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꼭지 자체가 지금 소송 중이고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꼭지를 달아서 마포구라고 꼭 찍혀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주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좀 남다르다, 그러니 이것은 일단 삭감하고 그리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울시 입장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보류했다가 추후 더 논의해서 결론 내시지요.

○**조정훈 위원** 이것 보류 요청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적절하다는 걸 예결위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승규 위원** 아니지요.

○**조정훈 위원** 그럼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김한규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강승규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김한규 위원** 아니, 그것은……

○**강승규 위원** 유지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김한규 위원**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 왔는데 그 부분까지도 예결위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결위원 차원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서울시의 요청 등에 의해서 이 부분 예산을 살리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게 말씀드리면 삭감의 이유가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입지 선정, 전략평가 등에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소송 중이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차관님, 이것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지금 상임위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100% 찬성하지 않는 주민 수용성 제고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여야 합의로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야당도 합의를 했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원복시키자는 게 아니고 보류시켜서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상임위와 여기에서 동의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김기웅·김위상·조은희·조지연 위원 등 특히 조은희 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의원이잖아요. 위원들이 원안 유지를 요청해 왔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소소 위 등에서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정책을 다시 처음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3번 미래환경산업 육성용자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재정용자(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국고 직접지원 용자사업으로 전환하였는데 1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이차보전방식이 적절하므로 1281억 3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아무래도 이자 부담과 재정 선순환 그다음에 기업들이 재정용자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재정용자방식을 선호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지금 취지가 국채로 조달한 용자사업 대신에 산은 차입 같은 이차보전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이자비용이 더 늘어나는 단점이 생깁니다. 국채 금리가 산은 차입 금리보다 더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비효율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기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정부 원안 유지요.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이게 지금 올해보다 27.1% 예산이 증대가 된 주된 원인은 이차보전사업으로 추진하던 시설을 국고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용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용자 채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사유로 전환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110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이자, 적자국채 이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부처가 부처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국채로 다 떠넘기면, 지금 한 해에 국채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국방비의 절반이 듭니다.

그래서 130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2.87%로 산정하고 6개월분을 반영하여 18억 6600

만 원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 차관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임미애 위원 이것 각각의 계산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차보전사업방식으로 했을 때하고 재정융자방식으로 했을 때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아마 환경기술원이 산업은행에 차입을 할 때는 이게 이차보전방식으로 할 때 3.75% 금리 부담이 있고요. 국고채 재정융자방식으로 했을 때는 금리가 한 3.2%에서 3.28%니까 0.55%p 정도 재정융자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조달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비용이 재정융자 했을 때 32억 그다음에 이차보전 할 때 37.5억 원이니까 5억~6억 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이차보전 할 때 더 발생한다는 문제고, 문제는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더라도 일반 국가부채하고 그다음에 환경기술원 정부 부채가 같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부채 측면에서는 원 주머니에서 오른 주머니 넘어가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전체 부채에는 별 영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차보전사업으로 집행을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저희가 확인해도, 예산이 더 많이 든다라고 확인해도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차보전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이 사업의 대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더 불편함은 없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재정융자방식은 바로바로……

○임미애 위원 바로 대출이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바로바로 원하는 데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주기가 훨씬 단축될 수 있고 그런데 이차보전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중금리 상황에서는 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정융자방식이 편리하다,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답변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차보전 사업 방식보다는 재정융자 사업이 훨씬 더 대상자 입장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원안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승규 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차관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왜 그동안은 이차보전 사업 방식으로 해왔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은 재정융자 사업으로 했었고 이것만 이차보전 방식……

○강승규 위원 왜 그랬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아마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재정으로 했

을 때 차입했던 것보다는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차……

○강승규 위원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그때는 왜 좋다고 판단하나……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당장 정부가 특정 용자를, 국채를 발행해서 용자를 해야 될 소요는 좀 줄어드니까 시중에서,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좀 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는 재정으로 하는 게 더, 재정이 늘어나고 국고이자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또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 당초에 이차보전 사업으로 선정할 때는 주로 단기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이차보전 사업으로 선정할 때 사실 이게 장기 사업이고 장기 회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이차보전 사업보다 재정용자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을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차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한 것은 정부가 이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을 잘못 선택해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강승규 위원 그래서 재정용자가,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게 전체적인 비용 최소화에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차보전 방식이 다른 장점이 더 있었는데 그걸 지금 숨기는 건 없어요? 그렇게 지금 차관님이, 그러면 당연히 재정으로 직접투자를 해 왔어야 되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뭐 다른 숨기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는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기업들의 편의 차원에서 재정용자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강승규 위원 그런데 국고이자도 막 계속, 그러면 다른 것도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유리한 조달…… 이자는 당연히 낮겠지요. 다른 환경오염방지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 다른 사업도 많이 들 텐데 그러면 앞으로 민간에서 이런 이차보전 방식으로 하던 것 직접 재정으로 투자한다고 다 전환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부처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전부 다 사업 특성에 따라 케이스별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리 부담이 되는 장기 사업이라는 부분이고요. 장기 사업 측면을 고려해 준다고 그러면 재정용자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소위원장 한병도 이제 좀 요약해 주세요.

○강승규 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차관님이 설명한 그런 것도 이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해 오다가 지금 다시 이것을 재정으로 직접 하겠다는 것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재정을 무작정 써 대서 지금 기후환경에너지의 여러 사업들에 막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오염방지시설을 해야 되지만 또 이 나름대로 이차보전 방식이 특징이 있을 텐데 그런 건 필요 없다, 이제 다 재정으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자 그런 사업 전환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는 온실가스 배출……

○강승규 위원 아니 국고이자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지금 1년에 26조 원씩 국고이자 부담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국고이자, 이자율 조금 0.5% 차이 난다는 거 그것, 아니 민간과 국고 사이에서 그게 엄청난 겁니까? 그게 사업 방식을 바꿀 정도로 절대적인 거예요, 그 이자율 차이가?

○소위원장 한병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재정용자 사업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이 사업이 미래환경산업 육성 여기 전략적으로 NDC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그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재정용자 방식은 아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 재정용자 방식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지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국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바로바로 상황이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위험률은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선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자도 수입이 회수가 되고 융자하기 때문에 대출했던 것도 다 회수가 되기 때문에……

○조계원 위원 바로바로 회수가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재정 차원에서 보면 이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국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사실 확인하고 보류를 하더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 1차관님한테 여쭙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지시설을 얘기하는 거지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이나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 포함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NDC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통상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대표적인 유형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장 굴뚝 같은 데의 탈질·탈황 시설 같은 것들이 600억, 700억, 10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국민들 대기오염 저감이나 이런 데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를 해 줘서 그런 것 설치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폐수에서 오염물질, 특정수질오염물질 같은 걸 걸러 내서 우리 수질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이런 유

형의 공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죽 보조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것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사실관계 확인했고, 이것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3건 있습니다.

먼저 1번 수소연료전지 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와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5억 9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1페이지 2번 무공해차 보급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속적인 집행 부진 및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4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고 전기 승용차는 지자체 실집행액이 50%에 불과하므로 59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안 유지 의견과 879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2023년, 24년에 전기차 화재 캐즘(Chasm)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이 정체됐습니다만 최근 전기차 보급이 다시 확대되고 있고 올해에는 20만 대를 돌파해서 내년에 100만 대 체제로 아마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기차 지원을 중단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게 어찌 됐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큰 흐름이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도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의 탄소중립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같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산업의 발전 속도나 이런 것과 맞춰져야 되는데 전기차 등 일부 탄소…… 태양광 등 이렇게 보면 실제 중국업체의 배를 불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실제적인 산업 수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는 수요를 우리 경제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전기차 생산 그리고 산업의 여러 가지 속도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지적한 것처럼 전기버스의 50%가 다 중국 차입니다, 지금도 우리 내부 시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어차피 캐즘도 있었고요 전기차로 가는 데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먼저 이소영 위원님 말씀 듣고 임미애 위원님 들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오히려 879억을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보류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가 420만 대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가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30년까지 매년 58만 대 보급이 필요한데 지금 책정된 예산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다고 해서 감액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집행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자체 매칭은 어떻게 하면 더 촉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후부가 앞장서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지금 이소영 위원님 말씀에 연이어서, 강승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해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승용차 같은 경우는 중국 차의 비중이 50%가 되진 않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국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물론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5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방식이라든가 이런 집행구조를 바뀌어서 사실상 지금 국산 비중이 65%를 넘어가고 있는 거고 계속적으로 국산 차 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보류해서 논의하는 걸로 할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보류 의견이니까요 김대식 위원님 말씀만 듣고……

○김대식 위원 차관님, 거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팩트 체크에서 약간 프로티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합니까? 그건 왜 그래요, 이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단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2023년에 있었던 화재가 영향이 좀 많이 컸었고요.

○**김대식 위원** 그 영향이 컸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다음에 신규 모델이 덜 나왔었고, 그런데 새로운 신규 모델이 최근에 많이 나왔고 올해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기차 인센티브를 전환지원금으로 해서 일단 기존의 내연차에서 전기차 전환할 때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키지 보급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만 대 돌파합니다. 내년엔 100만 대 체제로 가게 되면 이제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사실 독일이 2023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다음부터 독일 시장에서 전부 다 중국 차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케이스를 더 이상 저희들이 답습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한규 위원** 특정 회사 얘기를 드리면,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에서 제조되면 중국산으로 분류되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중국산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WTO 협정상 우리나라 최혜국 대우를 해 줘야 돼서 나라마다 차별 못 하고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든 사실 보조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은 비차별 원칙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배터리의 사양에 따라서 보조금을 달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연비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사실상 저희가 관련된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되게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이 되니까 지역별로 소진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국비 보조하고 지방 보조하고 동시에 받고 싶기 때문에 지역마다 소진되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건 환경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이 남았더라도 자기 지역의 지역 보조금이 소진되면 안 삽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이 남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역의 보조금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예산 한도를 넓혀야, 늘려야지만 환경부의 국비 보조금도 다 소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마치 우리가 전기차 수요가 부족해서 소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는 점을 아마 환경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년 11월, 12월 달에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출고한다고 12월 달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항상 눈치 보기 싸움이 많이 되고 지역별로 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보조금들이 있어요, 다자녀가구는 더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국비 소진이 안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산 삭감하고 별도로 저는 부대의견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것 제가 팩크 체크로 김한규 위원님 얘기한 것……

○소위원장 한병도 예.

○강승규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승용차 보조금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오던데 지금 김한규 위원님 질문은 지방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돼 있고 그래서 중앙에는 남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어떤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지방비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실 집행 못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별도, 모자랐을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별도 편성을 해 가지고……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지방마다 사정이 좀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완전히 다르지요. 서울은 예산이 풍부하고.

○강승규 위원 아니, 지방에서 예산이 안 쓰인다고 막 그러던데.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충전소 구축 지원과 무공해차 인프라펀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례적으로 실행률이 부진하고 무공해차 인프라펀드는 전기차 수요 정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3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액에 대해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아까 전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전기차 보급 사업과 충전소 보급 사업은 같이 가야 됩니다. 관련된, 균형된 접근 차원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것도 앞엿것과 사실은 같은 취지의 사업이고 논쟁이어서요, 보류해 주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85페이지 4번 수소산업 진흥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기반 구축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6년 지방비 일부 미확보 및 인허가 문제 등 건축 일정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설비·장비에 대한 발주계약 잔금 21억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이것은 정부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소위원장 한병도 예.

○이소영 위원 제가 이것을 철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평택시 지방비 미확보된 상황이라고 제가 들어서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이것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추후에 평택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정부안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이어서 101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자율계정) 세출 감액사업 1건과 감·증액사업 1건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입니다.

내역사업인 금강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사업에 대해 보다 적절한 세부사업으로 변경하고자 이 사업 예산 3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운영(자율)사업의 내역사업인 금강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증·감액 연계이므로 기후부와 기재부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사업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증·감액 연계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일 계정, 동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증·감액 연계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2번 노후상수도정비(자율)입니다.

경북 김천시 황금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필요해짐에 따라 포괄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인 김천 노후상수관망 정비의 9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분만큼 김천 노후정수장 정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시 증·감액 연계이므로 기후부와 기재부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증감 연계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재부 의견 들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동일 계정, 동일 지역에서 사업간 변동이므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감액사업 3건과 감·증액사업 4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11년부터 16년까지 수행한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사업과 중복 추진 우려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임위는 140억 원 감액 의견을, 강승규 위원님은 220억 전액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상임위 감액 의견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이것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상임위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2번 무탄소에너지 보증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5년 사업성과 달성률이 5% 미만에 불과하므로 9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이오매스, 암모니아 연소발전 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리튬이온배터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2건에 대해서.

무탄소에너지 보증과 관련해서는 10월 말 기준으로 성과 달성률과 산업계 보증 수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책 연계성과 산업 수요를 고려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

○박민규 위원 제가 이것 감액안을 냈는데요.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적극 한다는 설명들이 있어서 이것 철회하고.

다만 부대의견으로, 바이오매스 등이 화력발전 존속에 기여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바이오매스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는 부대의견을 전제로 제 감액안은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박민규 위원님은 철회해 주셨고요.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낸 부분은 전체 500억 원의 예산 중 한 400억 원은 해상풍력 관련 보증 지원이고 나머지 100억 원이 그 외에 해당하는 무탄소 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인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그 사업 성과 달성률이 5% 미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합니다.

○조정훈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은 무탄소에너지기업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채 발급할 때 보증을 서 준다는 겁니까? 채무를 보증한다는 게 뭘니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무탄소에너지기업들, 재생에너지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은행에서 용자를 받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아마……

○조정훈 위원 연대보증을 선다는 겁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에서 신용보증, 중소기업들 지원할 때 신용보증을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보증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은행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또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 보증액이 얼마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올해 처음으로 해서 420억, 올해 처음으로 본예산에 들어와서 현재 집행률이……

○조정훈 위원 420억 원을 보증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현재 집행률이 90.2%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 보증이 없었으면 이 무탄소에너지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없었을 회사들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일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보증을 통해서 금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것 수치 있으세요, 보증을 통해서 시장금리 대비 몇 퍼센트 낮게 그 보증을 받았는지?

저는 이것 보류하기를 요청드리고요. 그 사업 달성률이 5% 미만이라고 써 있지만 최근 자료는 꽤 올라갔다고 주장하시니까 그에 대한 자료와 지금 이 돈을 써서 과연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아까 박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무탄소기업들의 그 사업의 내용 그리고 금융 비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리고 한계기업이 얼마나 시장 금융 유동성 접근을 할 수 있었는지 자료를 보고 소소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질문인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다고요? 2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임미애 위원 올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거예요? 작년에 예산 짤 때 이게 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서 25년 5월 달에 사업 공고를 냈고 그때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임미애 위원 5월 달에 사업 공고 냈고?

그래서 지금 집행률은 얼마인가요? 96%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무탄소 분야는 90% 정도 되고요. 해상풍력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21%, 조금 다소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해상풍력 사업까지는 PF가 좀 되고 있고 해상풍력 사업이 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해상풍력 사업보다 이게 더 집행률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무탄소 보증사업이 더 집행률이 높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까 얘기했던 90.2% 이것 맞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계원 위원 올해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연말까지는 거의 100%까지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성과 달성률이 5% 미만인 아니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수치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원래 산자부에 있던 사업이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채무를 보증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걸 계속 일반회계에서 다룰 계획인가요, 아니면 따로 기후에너지부로 넘어왔으니 이것과 관련된 다른 계정을 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다른 계정을 하지는 않고요. 현재 이거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내에서 세부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기후부로 넘어와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5년 무탄소에너지의 사업성과 달성률이 제가 5%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92%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인데 최근에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사실은 이게 무탄소에너지 보증이 정부……

○조정훈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무탄소에너지 보증, 무탄소보다도 해상풍력의 금액이 큼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파악한 자료는 500억 중에서 400억이 해상풍력이고 나머지 100억 정도가 무탄소에너지인데 그 무탄소에너지의 사업성과율이 5% 미만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특히 이게 지금 저희 충청도 지역도 좀 문제인데 바이오매스나 암모니아 연소 이런 부분 등이 여러 가지 또 평가, 의견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주시는 건 92%, 오히려 성과가 좋다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지 않으니깐 최근에 이게 갑자기, 이 자료가 만들어졌을 것이 대개 한 10월 기준 같은데 그러면 11월 달에 대거 이게 보증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자료를 잘못 받은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제가 관련된 수치를 말씀드리면 아마 5%는 해상풍력을 포함했을 때 7월 달 기준으로……

○강승규 위원 해상풍력을 다 포함했을 때, 무탄소만이 아니라 사업성과……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7월 달 기준으로 보신 거고요.

○강승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무탄소…… 높아지지만 해상풍력은 현재까지는 낮지만 앞으로 높아질 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다시 말씀드리면 무탄소만 하면 90% 이상이고요. 해상풍력까지 포함했을 때는 21.5%라는 점이고요.

○강승규 위원 5%라는 거는 10월 달의 그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7월 달.

○강승규 위원 7월 달 기준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아마 예산편성 시점에서 제기됐던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래도 해상풍력 포함해 20%라는 것은 너무 낮지 않아요? 이거는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해상풍력과 관련된 일단 무탄소 쪽,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PF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지개를 켜고 있어서 아마 보증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하기 때문에 보증 수요는 먼저 선발생한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이걸 보류를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저한테 제대로 한번 주시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그걸 나중에 의견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3번 국산무연탄사용발전소 한시적지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인 석탄 중에서도 가장 연료 효율이 낮은 무연탄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탈석탄 차원에서 조기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1억 원 감액 의견과 26억 6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석탄 폐지와 관련해서 정의로운 전환 차원에서 당분간 탄광을 저희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일정 정도 국내에서 생산되고 무연탄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1개 발전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발생한 손실에서 지속적으로 당분간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낸 사람으로서 저는 이게, 이후에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29년까지라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것과 몇 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서, 뒤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요. 같이 묶어서, 이걸 보류로 넘겨서 추후에 어떤 전환을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한 추후 정책이 마련되면 그걸 같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산중위 위원으로서 우리 산중위원들이 현장국감으로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국감 때. 그 현장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조기 폐쇄 등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고, 만약에 조기 폐쇄한다고 할 때 현장에서 어떠냐 그랬더니 사업주 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노조 위원장도 희망한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직업을 잃게 되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그랬더니 사오십 대까지의 노동자들은 폐쇄를 원하고, 조기 폐쇄를 해서 보상금을 받기를 원하고 좀 남아 있는 연로하신 노동자들은 반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됐든 무연탄은 이제 생산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힌 거고 29년까지…… 당초가 29년까지지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이 안 난 거군요,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론이 있고요.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강승규 위원 그 전에 폐쇄는 아니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 전에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그 전에 폐쇄한다는 설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정부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이 무연탄이라고 하는 게 미세먼지 발생계수나 온실가스 발생계수가 다른 연료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국내 생산 무연탄이 좀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환하는 데에 몇 년 유예를 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보조금도 주고 무연탄 계속 태우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29년까지 갈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이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사실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이런 비슷한 대대적인 조기 폐쇄를 한 국가들 사례에서 보면 연료하신 노동자분들한테도 재취업이나 재교육을 위한 비용들을 지원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류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좀 전향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보류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한 가지만 팩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다른 탄광들은 올해로 다 정리가 되고 있고 근로자 전환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조기 위로금, 퇴직금들 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경동탄광이 생산하는 무연탄을 일부, 2029년까지는 좀…… 경동탄광이 민자 탄광입니다. 그 부분까지 좀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었고, 원래 목표는 훨씬 뒤까지 넘어가는 것이지만 저희가 조기 폐광을 유도하는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다녀와서 지금 얘기드린 사례가 경동탄광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09페이지 4번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입니다.

내역사업인 USC급 보일러 암모니아 혼소 발전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암모니아 혼소는 기술개발 이후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고, 높은 암모니아 가격으로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는 35억 4300만 원 감액 의견을 그리고 38억 43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전액 감액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중국이 장악하다시피 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장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자가 아닌 R&D 및 상용화 예산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21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사업 예산을 늘리기에 앞서 재생에너지 발생 비중이 낮은 근본 원인 해결이 필요하고 전력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223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보다 과도하게 투자, 정부 재정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사실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감액이 많이 났습니다. 예산을 정상화하고 정부 투자활동에 있어서 태양광 제조업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안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에너지부가 산중위에 있을 때도 저희가 많이 제기했던 얘기인데 실제로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된다는 큰 시대적 흐름을 저희가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에너지라는 것이 발전된 것을 송배전을 해서 수요처에서 써야 에너지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계통의 문제 등으로 현재 서부지역 중심으로, 우리 국토의 서부지역 쪽으로 많이 증설된 태양광 등의 발전용량이 계통 문제 등으로 제대로 송배전되지 않아 낭비되고 있는 전력량이 무려 3GW, 원전 3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 우리가 신재생이 주로 태양광 등인데 이 설비 등이 대부분 다 중국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용자 등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면 발전된 용량이 제때 송배전되지 않아서 낭비되고 있고, 지금 계통이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송배전 지원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넘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대거 계속 NDC 높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높여서 한들 상당 부분이 재정 낭비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는 대폭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할 때는 R&D 등에 지금은 더욱더 투자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저는 질문인데요. 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용자) 사업이 태양광 같은 발전기, 발전소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ESS나 인버터 같은 계통 부담을 낮추는 설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일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전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거지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설비를 할 때 인버터라든지 ESS라든지 그렇게 합니다만 우선은 주로 설비 위주로, 발전설비 위주로 금융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강승규 위원님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재생에너지의 발전소만 늘어난다고 했을 때 계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에너지 낭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미애 위원님의 증액 요구나 상임위의 증액 요구나 이런 것들의 취지가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변동성과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계통에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면 각기의 발전소에 ESS가 부착돼서 출력 제어를 할 수 있다거나 또 고성능 인버터를 통해서 중앙 급전발전기와 유사하게 계통에 제어를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발전기만 많이 설치되는 것보다 이런 낭비적인 요소를 더 줄이고 계통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증액에 대한 의견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감액하기보다는 이 대상을 그런 계통적 기능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대상의 확대, 중점 분야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업은 확대돼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말씀 듣고 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말씀을 들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소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까 강승규 위원님 말씀 중에 여기에 중국산 보조장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중국산 보조장치가 내재된 설비에 이 사업비가 쓰여지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그렇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융자사업도 있고 다음번에 심의하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사업들은 저탄소 인증 모듈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금융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국내산 보조장치에 대해서만 집행된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kW당 몇 그램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하는 설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중국산은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벽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게 제가 22년도부터 예산을 주 보니까요 22년도에 5722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23년도에 4673억, 그러다가 24년도 3693억, 25년도 본예산에 3200억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삭감되면서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도 같이 줄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연속되어서 감액된 예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최형두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 독일 같은 데 사례가 있습니다.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고 원전은 나쁜 에너지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탄도 현실적으로 연간 전력의 30%를 석탄

발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은 뭐로 살릴 겁니까? AI GPU 26만 개 들어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비싼 전력 돌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산업 안 그래도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기업들 죽일 일 있습니까?

지난번 예결위 전체 질의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우리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계통망이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태양광, 빛 좋은 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수도권으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고 그것 부지하세월입니다. 우리 밀양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은 계통망도 좀 있어야겠고 또 ESS에 관한 이런 문제들뿐 아니라 이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RE 100%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스리마일에서, 그때 잠시 사고 났던 원전까지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안위에서 그동안 발전 중지됐던 것들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에너지를 공급하고 그것은 신재생만이 전부가 아니라 탈탄소라고 하는, 카본프리라고 하는 큰 목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드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전력요금이 어쨌거나 아직은 신재생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리고 신재생을 생산하면 신재생에 대해서 지금 한전이라든가 의무 수매를 하거나 또 수매 이렇게…… 매매하는 매입가격도 다른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텐데 그냥 하나의 목표만 정해 놓고 여러 태양광이나 이런 장비 등 기술만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 좀 속도 조절과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보류해서 정말 국가에너지 우리 NDC 목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전력 공급은 과연 GPU 26만 개를 돌릴 수 있는, 그리고 AI 이렇게 되면 전기 수요가 4배가 폭증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곳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목표를 하나 정해 놓고 그냥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렇게 완전 몰빵하는 듯이 이런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한전 적자를 더 누적시킬 게 명명백백하고 전기요금 인하로 금방 이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비싼 전기요금이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도 좀 깨달아서 에너지믹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친환경에너지 3GW가 지금 사실상 불안정한 전력망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다,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게 사실인가요? 팩트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3GW까지 여분은 제가 수치를 당장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출력제어로 되고 있는 것은 한 200MWh 정도, 연중으로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피크 수요—여름철·겨울철의 피크 수요—가 아닌 경부하기—봄·가을입니다—그때 태양광이 좀 많이 나올 때 출력제어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에너지믹스는 갖춰야 된다. 그 부분은 좀 오히려 이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독일의 사례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사실상 원전을 거의 줄여가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독일은 탈원전을 했다가 최근에 재생에너지 위주로 정책들이 계속 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원전 한 번 짓는 데 최소 기간이 7년 이상 소요되는 거지요? 오히려 지금 전력 수요를 조기에 대응하는 데는 친환경에너지가 더 빠르지요? 그러면 필요한 전력망 그리드를 확보하고 그다음 여름철 피크 수요를 좀 감당해 내기 위한 ESS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전력망에 효율적으로 실을 수 있는 인버터, 이런 부분까지 좀 추가적으로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견인해 내는 게 지금 AI나 이쪽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논점 이탈이고 지금 계속 좀 왜곡인데 일단 지금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금융지원 융자 사업하는 거고 원전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에너지믹스 얘기까지 가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은 꼭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도 다들 동의하는 바일 텐데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 30% 되나요? 10%가 안 됩니다. 한 자릿수여 가지고 지금 OECD에서 꼴찌 중의 꼴찌고요. 여기에서 이것 금융지원 좀 해 가지고 비중을 조금 더 높이자고 하는데 이게 뭐 비합리적인 사업도 아니고 그런 목표도 아니고 이것 지금 OECD 꼴찌 탈출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에서 이게 뭐가 에너지믹스가 비합리적이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얘기하시는데요. 출력제어는 원래 다 하는 겁니다. 원전도 출력제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비상상황에서는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비를 갖춰 놓고 그것을 운전하는 것은 전력거래소나 어떤 전력감독 당국에서의 여러 가지 전력계통의 부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설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발전한다?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출력제어? 강원도의 석탄발전소들은 송전선도 없는데 막 때려 지어 놓고 그것 가동을 얼마 전까지 절반도 못 돌렸지요? 강원도의 석탄발전소는 엄청나게 많은데 다 설비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량요금은 우리 전기요금으로 주고 있고요.

이런 에너지믹스와 에너지 설비의 편중과 불합리성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지금 다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그것을 지금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15%, 20% 나아가는 것은 아무도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텐데 왜 이런 융자 사업을 가지고 지금 원전 얘기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송기현 위원** 저도 추가 잠깐, 헛갈려서……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 사업이 여기 설명한 것처럼 주택·건물, 학교 등 공공기관 이런 데에 태양광, 지열 이런 것 설치하는 것 지원한다는 사업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융자 사업이고요.

○송기현 위원 융자 사업인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보조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리드나 원전하고 관계없는 사업이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우리 융자에서는 6800억입니다마는 저희가 수요 조사하면 7500억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있고……

○송기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쓰는…… 여기 설명한 거 보면 공공기관 건물이나 주택 이런 데다가 태양광시설, 지열시설 이런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송기현 위원 기존에 있는 발전소, 그리드하고 이런 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다만 전력망과 관련해 갖고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송기현 위원 그것은 조금 연계는 돼 있지요. 왜냐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여기 지금 수요가 나와 있는 것은 전력망이 없는 데는 저희가 수요, 금융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게 없는 데도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전력망이 있는데, 전력망이 여유가 있는데 또는 ESS를 붙여 갖고 또는 출력제어 조건부로 전력계통 연계 가능한 지역에서만 수요를 말씀드립니다.

○송기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논란이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성격이냐를 명백히 하려고 한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토론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감액 의견에 대해서 강승규 위원님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강승규 위원 변함없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감축 평가를 받았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43억 3600만 원 감액 의견과 613억 4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연료전지는 그 특성상 재생에너지로서 실효성이 낮아 지원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하기 위해 16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원안 유지 의견과 10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는 2건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감축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중의 내역사업인 태양광충회 개최 지원에 대해서 감축의 의견이 나왔던 건데 이게 전체 사업에 대한 감축 의견이 나왔던 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예산도 그동안 삭감되거나 규모가 줄어든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암모니아라든지 연료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수요가 많은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풍력, 육상풍력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듣고 그다음에 이소영 위원님.

○강승규 위원 아까 신재생에너지의 용자 사업이든 보조 사업이든 저희가 이것의 급격한 확장, 지금 1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우리 산업의 그리고 최근의 AI 등 첨단산업의 패러다임상 이 신재생에너지가 너무 산업에 또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계통에도 문제가 있고 또 출력제어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에 대폭 증액하거나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감축안을 내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에너지믹스와도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지금의 산업 패러다임상 이렇게 급격히 감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하고 전기료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위원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데 112페이지에서부터 116페이지까지가 덩어리, 세부사업명 안에 속하기는 하는데 사실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김한규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이 내신 것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관련한 확충 사업이고 또 증액 중에는 RE100마을 지원도 있고, 제가 낸 112페이지의 세 번째 칸에 있는 감액 의견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 있는 태양광·태양열·지열 이렇게 하는 내용에 관련된 게 아니라 연료전지로 쓰이고 있는 16억 원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에너지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연료전지 관련한 부분부터 다 포함해서 받아들이지 않다는 건가요? 연료전지와 관련된 이 보급지원 사업을 중단할 거라는 점을 제가 알고 감액 의견을 낸 건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조정을 하고 대신 금액을 줄이지 않고 그 금액을 수요가 많은 태양광이나 지열 쪽으로 좀 돌리겠다. 그러니까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연료전지를 뺀 다른 재생에너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박민규 위원님께서도 기존에 질의하신 감액 의견을 철회하시면서 부대의견으로 어떤 취지를 다는 거를 조건으로 철회한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잖아요, 중기부 저희 심의할 때. 그게 가능한가요? 부대의견 질의가 안 들어가 있어도 이 본문에서의 감액 의견을 철회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청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그런 사례 많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 연료전지와 관련한 16억 감액 의견은 철회를 하되 앞으로 이 항목을 연료전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걸 조건으로 철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부대의견 팀에 전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 위원 아까 부처에서 설명하실 때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감축 평가를 받았다는 언급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그 평가를 누가 한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아마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훈 위원 아니, 오해가 있었다고 하시려면 뭔가 좀 알아보고 오해가 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계원 위원 그것 세부사업이 아닌 대전시와 함께 준비 중인 세계태양광총회, 그 1건의 내역사업이 아닌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당시에 아마 국회나…… 정확하게 좀 파악을, 현재 소스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계태양광총회 내역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대전시에서 여기에 매칭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훈 위원 그런데 그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누가 했냐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기재부에서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런데 기재부가 평가할 때 오해를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아마 이 부분만 지적을 했는데, 전체 사업에 대한 감축 의견은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동의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훈 위원 그러면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저희가 이 평가를 수행한, 기재부가 전문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한 내용이 맞고요. 그때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재생에너지 보급하고 관련된 융자사업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게 아니고 세계태양광총회 개최 지원,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 전체 사업에 무슨 재생에너지 보급 융자사업의 규모를……

○조정훈 위원 이건 융자사업 아니에요, 이건 보조금 사업이지.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보조사업하고 연계해서 규모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러면 평가 결과를 저희한테도 보여 주세요. 그게 이것과 아니라

고 한다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강승규 위원 감축 평가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무슨 평가인지……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 잠깐만, 조정훈 위원님 끝나고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평가 결과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조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5번과 6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니까 위에는 융자사업인 것 같고, 저리 금융 지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조금 사업인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그러면 꽤 많은 예산들인데 이것들이 꽤 증액이 됐고, 정책 수단적 차원에서 뭐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이 사업 영역이 좀 다릅니다. 융자사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때 거기에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을 정부가 재정에서 융자를 해서 부담을 좀 덜어 주는 방식……

○조정훈 위원 공급을 늘리는 거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리고 보조사업은 주로 자가용으로, 사업자들이 아니라 주로 학교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건물에서 자가용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할 때……

○조정훈 위원 저는 백번 양보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OECD 꼴찌가 자랑스러운 수치는 아니다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재정 여력이 화수분은 아니잖아요. 이 방향으로 돈 쓴 지가 우리가 꽤 되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한 게 6조 원이 넘었다, 누적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게.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정책목표 달성은 미비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정책수단이 과연 이게 다인지, 보조금에 계속 돈 주고 금융 지원, 융자와 보급 지원 계속 돈 이렇게 늘려 가면…… 언제 이거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까? 두 자릿수, 15%, 20% 언제쯤 갈 겁니까? 그냥 될 때까지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주시면 우리가 이 정도 목표 달성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에도……

이 돈 이렇게 주시면 26년에는 얼마까지 달성하겠다 목표가 있어요? 26년 목표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26년 목표는 전체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33~34GW 정도 되니다만 저희가 60, 55GW 정도……

○조정훈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증가는 한 60% 정도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신재생에너지 증가를 60% 하겠다, 25년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내년에……

○**조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 해서, 만약에 돈 다 드렸는데 60% 안 되면 책임지십니까. 책임지십니까.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아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정훈 위원** 회의록에 적어 놓겠습니다,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열심히 보급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원안 유지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최형두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 이거 정리하면 어떨까요? 똑같은 내용이……

○**최형두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차관 말 중에 좀 정정해야 될 것도 있고……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최형두 위원님 말씀 듣고 임미애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한 1분만 얘기만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독일에서 탈원전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독일……

○**최형두 위원** 자, 지금 독일에서 탈원전 이후에 나타난 전력 부족, 전력난, 요금 폭등, 전력공급 공백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탈원전 이후에 독일에서 신재생 중심으로 했던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거는 아니지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독일 신문 보면 정전이 있을 경우에 촛불로 책 읽는 법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까 또 에너지믹스를 거론했더니 에너지믹스에 대해서 제 발언 취지를 달리 말씀하시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걸 가지고 에너지믹스를 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 10% 달성하는 데 우리 당이 막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싶은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2015년부터 25년까지 3조 6000억이 도입됐는데, 특히나 문재인 정부 때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2024년에 10.5%에 그쳤습니다. 누가, 우리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라든가……

○**이소영 위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시 논쟁하자는 거지요.

○**최형두 위원** 논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지요. 그리고……

○**이소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밤새워야 돼요. 문재인 정부 하고 싶은 대로 뭐 했어요?

○**최형두 위원** 아니, 그때 많이……

○**이소영 위원** 태양광 그렇게 악마화해 가지고 중금속 덩어리라고 온갖 정치공세를 하고……

○**최형두 위원** 아니, 이게 주민 수용성도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보류하시지요.

○**이소영 위원** 주민 수용성을 망친 게 누구인데요.

○**최형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지는…… 오케이, 그 말씀은 제가

취소를 할게요.

정부가 한번 모든 방점을 찍서 우선순위로 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해서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에 그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떤 에너지믹스로 우리가 카본프리라는 탈탄소를 달성하면서 또 산업의 경쟁력, AI 전력수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고요. 문제는 재정 여력 아니겠습니까. 재정을 그렇게 투입했는데 다른 재정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수많은 적자 요인이 발생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로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좀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자가용으로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자가용의 용량이 얼마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주로 500kW 미만짜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임미애 위원 500kW가 아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100kW 미만……

○임미애 위원 100kW 미만이요? 아닙니다. 10kW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아, 10kW 미만이요.

○임미애 위원 예, 10kW 미만이고요. 농촌에서는 보통 3kW 정도를 농가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요구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량을 늘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농가용의 경우 그 넓은 지붕에 3kW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10kW, 20kW을 지붕에 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전에다 판매를 하면서 30kW 정도만 얹은 농가의 경우에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한 6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 마늘 창고에도 얹고 싶고 축사 지붕에도 얹고 싶고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현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고 하면 저는 정부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얹을 수 있는 태양광의 용량을 3kW로 제한하고 있는 것 이것은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먼저 이소영 간사님 하고……

○이소영 위원 자꾸 이렇게 이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팩트를 정정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생에너지 비용이 왜 높아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요금 늘어난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비싸기 때문이다 이러는데요. 다른 나라들에서 태양

광이나 풍력 발전단가가 최근 10년, 15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에서 아직 재생에너지가 비싼 이유는 국민들이, 주민들이 이 태양광과 풍력시설을 유헌시설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해도 엄청난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고 지자체들은 우후죽순 주거에서, 학교에서, 공공시설에서 500m씩 떨어져야 된다는 이격거리를 설정해서 태양광을 설치할 땅이 없고 토지 비용이 올라가고 이 인허가나 토지 비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훨씬 비싸져서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는 원전보다, 석탄보다 이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해지고 있는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곡선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누가 그것을 주도하고 누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우리나라 일부 정당과 일부 언론들이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악마화하면서, 이것은 산사태를 유발하고 중금속 덩어리고 전자파가 나와서 사람들이 암 걸려 죽을 수 있고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아닙니까,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제 비싸서 전기요금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이 방향성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니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을지, 어떻게 국민들한테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게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를 다,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곡된 정보가 온갖 데 퍼져 있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우리가 지금 이걸 논의하는 환경인데 그건 어느 특정 정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불행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문제가 정쟁화된 것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불행한 정책적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타개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계속 탈원전 얘기하고 있을 건가요, 재생에너지 얘기할 때마다? 이것 뒤에도 재생에너지 많아요. 계속 탈원전 논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밤을 한번 새워 보시지요.

○조계원 위원 이제 논쟁은 그만하시지요.

○조정훈 위원 위원장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조계원 위원 정리하시지요.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축소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아예 토론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한병도 지금 토론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어떻게 더……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소위원장 한병도 자, 정리하겠습니다.

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빠른 걸로 하고요.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으로 연료전지 사업 관련된 건 빠른 걸로 하고 보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조정훈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끌 생각은 없는데 특정 내역사업을 빼는데 총액을 보전하면 그 뺀 내역의 금액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그거를 논의를 하자고요. 그래서 보류한 것 아닙니까?

○조정훈 위원 아, 보류로?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감액을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를 하자고요.

○조정훈 위원 아니요, 감액을 동의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이소영 위원 제가 철회한 겁니다.

○조정훈 위원 아, 철회.

○소위원장 한병도 철회를 했잖아요.

○조정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17페이지입니다.

K-그리드 인재·창업 빨리 조성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타 에너지특화 대학 및 재학생들은 이 사업 참여 자체가 배제되며 기존 국가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45억 원 전액 감액 의견과 195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인턴십 이게 중복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만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에너지 전공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실증 클러스터하고 중복 얘기도 지적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실증 클러스터는 전력 기자재를 시험하고 설비 인증하는 데 집중했다면 동 사항은 가상의 마이크로그리드, 가상 전력망을 구축하고 거기서 플랫폼을 개발해서 전력 소비를 최적화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증 사업의 내역이 좀 다르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이 의견은 한 분씩만 들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이 사업의 문제는 사업 시행 주체를 한국에너지공대로 특정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인 K-그리드 이 사업이 245억 원, 한에공이, 한국에너지공대가 시행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정부 지원 10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지원 사업이 기본적으로 에너지공과대학 지원 사업이 또 이외에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부분이 있고, 이외의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 사업 56억 원, 차세대 그린센터 구축 93억 원, 정부 지원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 분야 타 대학 학생들을 제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한전 에너지공대가 생길 때 이미 광주의 GIST라든가 전남대 공대에서 왜 우리가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이미 그 당시에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

기서는 아예 에너지 분야 타 대학생들을 제외하는 예산 사업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 기술 개발, 인재 양성 효과라기보다는 대학 인프라 확충 목적이 강한 것 아니냐. 그리고 기존 국가 R&D 인프라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 기존에 에너지공대에 투입되는 다른 인프라 사업도 상당히 중복됩니다. 그리고 여타 에너지 특화 대학과 재학생들은 사업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문제점이 큼니다. 그뿐 아니라 타 사업과 달리 정부 지원율이 전액 100%인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예, 그러면 245억 원 감액 주장하시는 겁니까?

○최형두 위원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차관님, 지금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십을 에너지공과대학 출신만 하지는 않습니다. 전국 에너지 전공 대학, 에너지 전공 출신자들에 포괄적으로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과 중복 문제도 사실은 이것은 전력망에 관한 창업 밸리기 때문에 엄밀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새로운 사업들을 실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정 대학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사실 거기에 전남대도 있고 에너지공대도 있고 GIST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훌륭한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를 모아서 전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인재·창업 밸리를 만들겠다는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특정 대학 인프라 사업과는 좀 차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계획되었던 인턴십이 특정한 대학에만 집중되고 다른 대학을 제외시키는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사업을 계획……

○최형두 위원 사업계획서에 그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송기현 위원 질문한 다음에……

○조계원 위원 사업 주관 기관인 에너지공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얘기해 줘야지요.

○송기현 위원 임미애 위원 질의하시는데…… 다 마치신 거예요, 질의를?

○임미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강승규 위원 팩트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줘야 알지요.

○임미애 위원 제가 아직 발언이……

○소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제기하신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우리가 지금 분산에너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분산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결국은 VPP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증 클러스터를 우리가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말로는 분산에너지를 하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슬라인가요, 테슬라가 일본에 21년도부터인가 VPP 앞세워서 한 섬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 대한민국이 이제라도 시작해서 실증 클러스터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전격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 주시고 집중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팩트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그냥 의견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견 감액 의견을 유지하시는 거지요, 야당은?

○강승규 위원 잠깐만, 이게 에너지공대가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에요? 사업 시행 주체가 바뀌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에너지공단입니다. 시행 주체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처음에는 공대였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강승규 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사업을 준비하면서……

○강승규 위원 그런데 왜, 언제 바꿨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실무자가 답변……

○강승규 위원 왜 우리가 시행 주체를 에너지공대로 알고 있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과장 권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부의 분산에너지과장입니다.

이번에 국힘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서 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전국 에너지공과대학으로 다 확대를 했고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그것 자체가 지금 문제지요. 사업 시행 주체를 에너지공대로 해 가지고 예산서를 다 제출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했는데 국힘이 지적하니까 에너지공단으로 바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분산에너지과장 권영희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원래 당초에도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학생들도 다 참여하는 형태였고요.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다른 공과대학 학생들도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말을 자꾸 현장에 와서 바꾸면 무슨 수로…… 이게 보여야지요, 실제로.

○강승규 위원 이건 보류하고……

○조계원 위원 주관 기관을 에너지공대로 하니까 오해를 하신 것 아니에요.

○최형두 위원 오해라니, 처음에 법안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승규 위원 저희가 그것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얘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정훈 위원 사업계획서를 다시 주세요.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님.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보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한강수계 주민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은 면밀한 사업 설계 및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여 효과성과 타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48억 9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미 이 지자체들과 충분한 사업계획 협의가 돼 있고 한강수계에 있는 7개 시군에서 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설명회도 두 차례 거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연말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의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양수댐 인근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설치를 통해서 나온 수익금을 나눠 준다는 개념의 햇빛연금 사업인데요.

우리 의원실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계통이 포화 상태이고 자가발전 외에 판매용 태양광발전소 수익 창출이 불가하다는 의견 때문에 삭감 의견을 냈었는데 해당 지역구에 있는 송석준 의원 측에서 수도권의 배전 용량이 남아 있다, 그런 관계로 계통 접속이 가능하다 그런 설명을 또 한전 측에서 해 와서 제가 이것은 철회를 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원안 유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예, 원안 유지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이 건은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기후부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 회의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기상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이미선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 이미선입니다.

○기상청기획조정관 이정환 기획조정관 이정환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어서 오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138페이지 기상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사업이 1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최근 3년간 초과수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예산안 편성 시에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500만 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감·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기상청 마지막 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미래수요 대응 기상장비 및 활용기술 개발(R&D), 신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이동·원격 관측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미 이동형 기상관측차량 9대를 보유·운영하고 있고 현재 사용 중인 외산 기상레이더 신호처리기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산화의 기술·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3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기상청장 이미선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차원 입체 관측을 위한 레이더 장비와 그다음에 레이더 장비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거고요. 레이더에서 중요한 신호처리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중요한 R&D 사업입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할게요.

○소위원장 한병도 강승규 위원님.

○조정훈 위원 이건 AI 아니에요?

○기상청장 이미선 이건 AI는 아닙니다. 원격 장비의 신호처리……

○조정훈 위원 최소한 솔직하네요.

○강승규 위원 제가 신문기자 출신인데 우리네 우스갯소리로 기상청에서 예보를 잘못

하거나 이래서 큰 사고가 나면 슈퍼컴퓨터 때문이라고 늘 문제가 됐던 한 이삼십 년 전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이미 이동형 기상관측차량을 9대나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30억 들여서 또……

그러니까 장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신기술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첨단 장비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한번 설득을 좀 해 보세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기상관측차량 등을 9대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왜 꼭 필요한지 한번 설득을 해 보세요.

○기상청장 이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형 관측차량은 지상관측을 위주로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연직으로 입체 관측을 하기 위한 온습도 프로파일을 관측하기 위한 레이더 장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업에서 저희가 국산화 기술이 약 3·4단계 정도로 TRL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발됐는데 후속사업이 있어야지만 시제품까지 개발되는 레이더 장비를 통해서 3차원 입체 관측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레이더는 중요 장비의 기술이 사실은 외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산화에 대한 욕을 저희가 국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마이크로파의 증폭과 관련된 신호처리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원격 장비의……

○소위원장 한병도 해 줘, 이것.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기상청장 이미선 그래서 국산 R&D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국산 장비를 개발하면, 이것을 국산화하면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어요?

○기상청장 이미선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지금 이미 외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국산화를 해 가지고 우리 다른 업체도 쓰고 또 쓰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외국산을 쓰고 있는데 이걸 국산화한다고 그래서 30억씩을 왜 또 들여야 되지요?

○기상청장 이미선 이 부분은……

○강승규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예전에 기자 시절에 기상 오보만 나면 슈퍼컴퓨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슈퍼컴퓨터 타령을 하지요. 그런데 또 나요.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외산만이 아니라 기상청이 여러 가지 예보를 하는 데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외국산이 있는데 이 장비를 국산화해야 된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국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30억을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소위원장 한병도 김대식 위원님, 기대가 됩니다.

○김대식 위원 청장님, 우리가 지금 레이더를 일본 거를 받으니까, 전체 시간별 타임으로, 리얼타임으로?

○기상청장 이미선 저희가 11대를 기상청이 보유하고 실시간으로 5분 간격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생산하고 있지요?

○기상청장 이미선 예.

○김대식 위원 요즘 보니까 정확하게 맞더라고. 맞는데, 지금 우리가 국산화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기상청장 이미선 저희가 국산화 효율이 부품별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관측장비 중에서 한 40%, 50% 정도 됩니다. 특히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를 국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부품마다 지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신호처리기술은 사실은 국방 분야의 레이더 또 윈드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외산 장비 이런 데 핵심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산화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고리즘이라든가 품질 관리를, 그러니까 국내 지형이나 국내의 여건에 맞게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산 기술이 꼭 필요하고요.

레이더 신호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용화 전 단계까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년의 R&D를 통해서요.

○김대식 위원 그러면 30억 가지고 그 정도로까지 하면 국산화율이 몇 퍼센트 올라갑니까, 전체로? 우리가 지금 한 40% 국산화가 돼 있다 했잖아요.

○기상청장 이미선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합기술입니다. 그래서 신호처리기술만으로는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외산은 어디 거를 주로 씁니까? 독일 겁니까? 독일 지멘스 거 씁니까?

○기상청장 이미선 저희가 독일도 있고요, 중국 것도 있고요.

○김대식 위원 중국 것도 있고.

일본 거는 몇 프로 정도 씁니까?

○기상청장 이미선 일본 거는 현재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보류.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 보류가 아니에요.

김대식 위원님, 중액하자는 거지요?

○김대식 위원 이거는 수용해 주시지요.

○임미애 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연구를 많이 해 보니까 기상청을 도와줘야 되겠더라고.

(「역시」 하는 위원 있음)

○조정훈 위원 강승규 위원님 보류라고 했는데……

○강승규 위원 제가 보류라고 했잖아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김대식 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원안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원안 해.

○소위원장 한병도 이견요 쟁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보류.

○이소영 위원 최형두 위원님도 원안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문제 제기했잖아요.

○최형두 위원 30억 해 주고 큰돈 깎아요. 이거 30억 해 가지고 뭘……

○김대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해 줘요. 이걸 내가 연구 많이 했어요.

○송기현 위원 박형수 간사님한테 맡겨서 해요, 보류하지 말고.

○소위원장 한병도 아니요, 쟁점이 있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보류하겠는데 이걸 사업 자체가 국산화하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다 보류 안 해도 강승규 위원님, 지금 뭐 보는지 다 알아. 별 뭐가 없어.

○조정훈 위원 이거는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조정훈 위원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김대식 위원 강승규 위원이 뭐 플랜이 있나?

○강승규 위원 예, 플랜이 있어요.

○김대식 위원 무슨 플랜이 있어요?

○조정훈 위원 그 대신 합리적으로 저희가 결론 낼 테니까……

○기상청장 이미선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정부안이 의결되어서 간곡히, R&D 예산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소위원장 한병도 잠깐만 들어 보세요. 내가 다 듣잖아. 그런데 이걸 좀……

○기상청장 이미선 상임위에서도 정부안으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R&D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을, 국산화 장비로 도약할 수 있는 R&D 예산을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충분히 접수했고요. 설마 저희 국민의힘이 기상청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정당으로 남고 싶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며칠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길요.

○임미애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가 결정권이 없다는 게……

○조정훈 위원 제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보류가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유 알려 주세요, 비밀도 아닌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걸리는 부분을.

○이소영 위원 그러면 오늘 소위를 안 하는 게 맞지요. 간사님이 안 계셔서 아무 결정을 못 할 것 같으면……

○임미애 위원 자리에 안 계신 분이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부당합니다.

○강승규 위원 이거는 간사가 나한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간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간사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간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기상청장 이미선 위원장님……

○소위원장 한병도 자,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기는 할 텐데요.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자체적으로 단독 처리할 건이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 건은 특별한 뭐가 없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이쪽에 추진하는 사업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면 위원장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다 보류하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건 사실은 위원장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대체 AI도 아니고 주요 국정과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왜……

자, 이 건까지는 뭐가 있다고 하니까 보류를 하겠는데요. 그거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렇게 쟁점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단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기상청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한병도 오늘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자원부 남았는데요. 그건 내일 속도를 좀 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내일 다 끝내는 거지요?

○소위원장 한병도 내일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내일 못 끝내지요. 산업부도 남았고 고용부도 남았고……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부처가 큰 게 2개가 남았어요. 내일 못 끝내요.

○소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내일은 제가 속도감을 내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강승규 김기웅 김대식 김한규 노종면 박민규 박형수 송기현 이소영 이재관
임미애 조계원 조정훈 최형두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한승

제2차관 이호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검물관리정책실장 손옥주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기획재정담당관 이진석

지식재산처

차장 목성호

기획조정관 구영민

국세청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관세청

청장 이명구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기상청

청장 이미선

기획조정관 이정환